



2021.10.

국회에산정책처 | 재정전망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NABO Medium-Term Fiscal Projection: 2021~203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총괄 |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임준기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추계 | 윤주철 (작성 총괄)
박정환 (국세수입 작성 총괄)
정재호 문지은 박나경
유희수 김진이 이윤경
박선아 이미연 여은구
김효경 박지원 이정훈

경제전망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황종률 오현희 박선우

지원 | 박은주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1.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21. 10.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의무지출 증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548.8조원,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66.2조원(13.7%), 총지출은 46.4조원(8.3%)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개년 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자원배분 등을 담고 있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이번 전망은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라는 정책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재정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일러두기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경상GDP를 의미함
2. 각 표에서 “-”는 “0”을 포함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수를 의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3.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차 례

요 약 / vii

I. NABO 중기재정전망의 개요 / 1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1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2
가. 인구변수	2
나. 거시경제변수	3
3. 전망 시나리오	6

II. NABO 중기재정전망 / 11

1. 전망 절차	11
2.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12
3. 주요 항목별 전망 방법과 결과	17
가. 총수입	17
(1) 국세수입	18
(2) 국세외수입	23
나. 총지출	28
(1) 의무지출	30
(2) 재량지출	48
다. 재정수지	49
라. 국가채무	56
(1) 중앙정부 채무	57
(2) 지방정부 순채무	59

III.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61	
1. 주요 정책 변화	61
2.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재정 영향	64
가. 총수입	64
(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64
(2) 항목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차이	65
나. 총지출	69
(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69
(2) 항목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차이	70
다. 재정수지	74
라. 국가채무	77
IV. 요약 및 결론 / 79	
부 록 / 83	
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83
2. 주요국의 중기재정전망 사례	88

표 차례

[표 1]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3
[표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4
[표 3] 중기재정전망의 네 가지 시나리오	6
[표 4]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7
[표 5]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8
[표 6] 조세부담률 추이	8
[표 7]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13
[표 8]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14
[표 9]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15
[표 10]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16
[표 1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18
[표 12]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19
[표 13]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20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21
[표 1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21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세목	23
[표 17]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24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26
[표 1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기여금	28
[표 20]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29
[표 21]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30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32
[표 23]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33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35
[표 25]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36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38
[표 27]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39
[표 2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40
[표 29]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41
[표 3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42
[표 31]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43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45
[표 33]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46
[표 34]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	46
[표 3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의무지출	47
[표 36]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48
[표 37]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48
[표 38]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49
[표 39]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관리재정수지	51
[표 40]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56
[표 41]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일반회계 적자보전	58
[표 42]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중앙정부 채무(적자성 채무)	58
[표 43]	중기재정전망: 중앙정부 채무(금융성 채무)	59
[표 44]	중기재정전망: 지방정부 순채무	59
[표 45]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62
[표 46]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63
[표 47]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64
[표 4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65
[표 4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65
[표 5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66
[표 51]	주요 정책 변화: 부가가치세	67
[표 52]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68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외수입	68
[표 54]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장기여금	69
[표 55]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70

[표 56]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주요 의무지출 ..	71
[표 57]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의무지출	72
[표 58]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73
[표 59]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74
[표 60]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통합재정수지	75
[표 6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76
[표 6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77
[표 63]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78

그림 차례

[그림 1]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11
[그림 2]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전망	17
[그림 3]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18
[그림 4]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29
[그림 5]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50
[그림 6]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관리재정수지	51
[그림 7]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57

요 약

I. NABO 중기재정전망의 개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
 - 이번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하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재정 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로 제시
 - 시나리오는 정책 대안을 고려하여 현상유지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 세입확충 시나리오, 정책조합 시나리오로 설정
 - 중기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간(2021~2025년)보다 5년 더 연장한 10년(2021~2030년)
 - 중기재정전망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을 현행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주요 정책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실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 2021~2030년 자료를 활용
 - 총 인구는 2021년 5,182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으로 증가하나, 2029년부터는 감소하여 2030년에 5,193만명으로 전망
 - 0~5세 인구는 2021년 207만명(총 인구 수 대비 4.0%)에서 2030년 206만명

(총 인구 수 대비 4.0%)으로 감소

-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854만명(총 인구 수 대비 16.5%)에서 2030년 1,298만명(총 인구 수 대비 25.0%)으로 증가
 -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 수 대비 20.3%가 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인구 수(만명)	5,182	5,185	5,187	5,189	5,191	5,192	5,193	5,194	5,194	5,193
총 인구 증가율(%)	0.08	0.05	0.04	0.04	0.03	0.03	0.02	0.02	-0.00	-0.03
출생아 수(만명)	29	30	31	32	34	35	36	36	36	36
합계출산율(명)	0.86	0.90	0.93	0.97	1.00	1.04	1.08	1.11	1.13	1.14
0~5세 인구 수(만명)	207	193	184	181	181	184	189	195	201	206
0~5세 인구 비중(%)	4.0	3.7	3.6	3.5	3.5	3.5	3.6	3.8	3.9	4.0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854	897	945	994	1,051	1,111	1,159	1,212	1,252	1,298
65세 이상 인구 비중(%)	16.5	17.3	18.2	19.2	20.3	21.4	22.3	23.3	24.1	25.0
사망자 수(만명)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9.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21~2030년 거시경제 전망 사용

-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5.6%에서 2022년 4.2%로 하락하고, 이후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2030년에 3.3%로 낮아질 전망
 -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4.2%, 2023년 이후는 4.0%로, 2023년 이후 NABO보다 높은 수준
- 실업률은 2021년 4.0%에서 2025년 3.8%로 완만히 하락하겠지만 성장률 둔화와 고령층의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2016~2020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평균 3.9%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1%에서 2022년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1.6%로 하락하고, 2023년부터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2.0%) 수준을 하회하는 1.5% 수준으로 전망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평균
실질GDP 성장률	4.1	3.0	2.5	2.3	2.2	2.1	2.1	2.1	2.1	2.0	2.5
경상GDP 성장률 ¹⁾	5.6	4.2	3.7	3.5	3.4	3.4	3.4	3.4	3.4	3.3	3.7
실업률	4.0	3.9	3.9	3.9	3.8	3.8	3.8	3.8	3.8	3.9	3.9
취업자 수 증가율	0.8	1.0	0.8	0.7	0.7	0.7	0.6	0.5	0.3	0.1	0.6
소비자물가상승률	2.1	1.6	1.6	1.5	1.5	1.5	1.5	1.5	1.5	1.5	1.6
국고채금리(3년 만기)	1.3	1.8	2.1	1.9	1.7	1.5	1.5	1.5	1.5	1.5	1.6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5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주: 1)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5.6%, 2022년 4.2%, 2023~2025년은 매년 4.0%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전망 시나리오

- 중기재정전망에서는 향후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 각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 대안을 추가로 반영
 - 중기재정전망의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 세입확충 시나리오, 정책조합 시나리오로 설정
-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총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세법개정안,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변화 반영
 -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계획을 반영하며,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 2021~2025년 기간의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점감(2026~2029년은 매년 3.4%, 2030년은 3.3%)

-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년 재량지출(348.4조원) 수준과 동일하게 가정
- (세입확충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고, 2026년 추가로 1%p 인상
-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가정

중기재정전망의 네 가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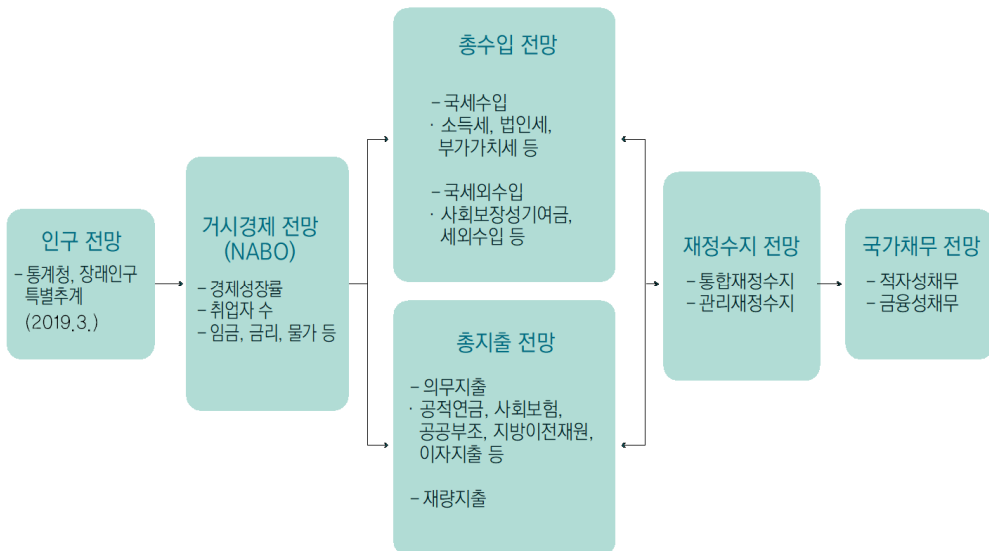
시나리오	주요 내용
현상유지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 세법개정안,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반영 - (총지출)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 반영 ※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증가율은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점감 (2026~2029년은 매년 3.4%, 2030년은 3.3%)
지출통제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년 재량지출(348.4조원) 수준과 동일하게 가정
세입확충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조세부담률 1%p 인상, 2026년 추가로 1%p 인상
정책조합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가정

II. NABO 중기재정전망

1. 전망 절차

- 중기재정전망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한 후 각 항목별 전망모형에 따라 경상가격으로 추계하여 합산하며, 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국가채무는 재정수지를 활용하여 전망
 -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국세외수입은 다시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으로 구분
 - 총지출은 의무지출(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과 재량지출로 구분
 -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입과 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전망한 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 산출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2.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 (현상유지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198.8조원(78.9%)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7.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GDP 대비 비율)	(25.8)	(26.0)	(25.8)	(26.0)	(26.2)	(26.4)	(26.4)	(26.5)	(26.6)	(26.7)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5.1	3.9
(전년 대비 증가율)		(5.5)	(1.9)	(4.2)	(4.3)	(4.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7	668.5	698.4	730.2	760.6	790.3	823.3	857.1	3.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6)	(29.9)	(30.1)	(30.3)	(30.5)	(30.7)	
의무지출	284.1	310.7	313.8	332.3	350.0	370.0	388.1	405.2	425.1	445.8	5.1
(전년 대비 증가율)		(9.4)	(1.0)	(5.9)	(5.3)	(5.7)	(4.9)	(4.4)	(4.9)	(4.9)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통합재정수지	-83.5	-61.9	-67.1	-75.0	-79.3	-85.9	-93.2	-97.6	-104.8	-112.6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5)	(-3.7)	(-3.7)	(-3.9)	(-4.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111.7	-119.0	-123.4	-129.8	-137.2	-144.2	-150.9	-158.4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5.3)	(-5.4)	(-5.5)	(-5.6)	(-5.7)	
국가채무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75.4	1,712.3	1,867.4	2,029.5	2,198.8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5)	(67.8)	(71.6)	(75.2)	(78.9)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지출통제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016.7조원(72.3%)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91.4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GDP 대비 비율)	(25.8)	(26.0)	(25.8)	(26.0)	(26.2)	(26.4)	(26.4)	(26.5)	(26.6)	(26.7)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5.1	3.9
(전년 대비 증가율)		(5.5)	(1.9)	(4.2)	(4.3)	(4.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7	668.5	698.4	718.2	736.1	752.6	771.7	791.4	2.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6)	(29.4)	(29.2)	(28.8)	(28.6)	(28.4)	
의무지출	284.1	310.7	313.8	332.3	350.0	369.8	387.7	404.2	423.4	443.1	5.1
(전년 대비 증가율)		(9.4)	(1.0)	(5.9)	(5.3)	(5.7)	(4.8)	(4.3)	(4.7)	(4.7)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83.5	-61.9	-67.1	-75.0	-79.3	-73.9	-68.7	-59.9	-53.2	-46.9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0)	(-2.7)	(-2.3)	(-2.0)	(-1.7)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111.7	-119.0	-123.4	-117.8	-112.7	-106.5	-99.3	-92.7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4.8)	(-4.5)	(-4.1)	(-3.7)	(-3.3)	
국가채무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64.0	1,677.6	1,796.8	1,909.9	2,016.7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1)	(66.5)	(68.9)	(70.8)	(72.3)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세입확충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1,871.4조원(67.1%)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 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각 1%p 단계적으로 인상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1.6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
 -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이 소폭 감소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GDP 대비 비율)	(25.8)	(26.0)	(26.8)	(27.0)	(27.2)	(28.4)	(28.4)	(28.5)	(28.6)	(28.7)	
국세수입	323.0	340.9	369.4	384.9	401.1	443.1	458.3	475.6	493.2	510.9	5.2
(전년 대비 증가율)		(5.5)	(8.4)	(4.2)	(4.2)	(10.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5	667.9	697.2	728.4	757.9	786.7	818.8	851.6	3.8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5)	(29.8)	(30.0)	(30.1)	(30.3)	(30.6)	
의무지출	284.1	310.7	313.6	331.7	348.9	368.2	385.5	401.6	420.6	440.3	5.0
(전년 대비 증가율)		(9.4)	(0.9)	(5.8)	(5.2)	(5.5)	(4.7)	(4.2)	(4.7)	(4.7)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통합재정수지	-83.5	-61.9	-44.8	-51.5	-54.6	-35.3	-40.1	-41.8	-46.3	-51.3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4)	(-1.6)	(-1.6)	(-1.7)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89.5	-95.5	-98.7	-79.2	-84.1	-88.4	-92.4	-97.2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3.2)	(-3.3)	(-3.4)	(-3.4)	(-3.5)	
국가채무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65.6	1,551.9	1,654.0	1,760.4	1,871.4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60.0)	(61.5)	(63.4)	(65.2)	(67.1)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정책조합 시나리오) 국가채무가 2021년 965.9조원(경상GDP 대비 47.3%)에서 2030년 1,689.3조원(60.6%)으로 증가

-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 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각 1%p 단계적으로 인상
-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85.9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통제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이 소폭 감소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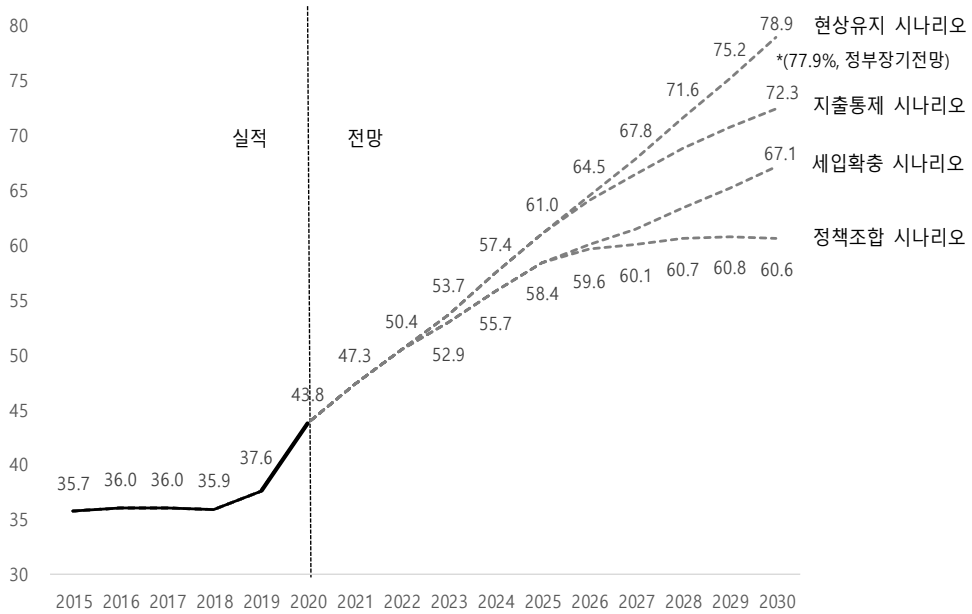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GDP 대비 비율)	(25.8)	(26.0)	(26.8)	(27.0)	(27.2)	(28.4)	(28.4)	(28.5)	(28.6)	(28.7)	
국세수입	323.0	340.9	369.4	384.9	401.1	443.1	458.3	475.6	493.2	510.9	5.2
(전년 대비 증가율)		(5.5)	(8.4)	(4.2)	(4.2)	(10.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5	667.9	697.2	716.4	733.4	749.0	767.2	785.9	2.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5)	(29.4)	(29.1)	(28.7)	(28.4)	(28.2)	
의무지출	284.1	310.7	313.6	331.7	348.9	368.1	385.1	400.7	418.8	437.6	4.9
(전년 대비 증가율)		(9.4)	(0.9)	(5.8)	(5.2)	(5.5)	(4.6)	(4.0)	(4.5)	(4.5)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83.5	-61.9	-44.8	-51.5	-54.6	-23.3	-15.6	-4.1	5.2	14.4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0)	(-0.6)	(-0.2)	(0.2)	(0.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89.5	-95.5	-98.7	-67.2	-59.6	-50.7	-40.8	-31.5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2.8)	(-2.4)	(-1.9)	(-1.5)	(-1.1)	
국가채무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54.2	1,517.2	1,583.4	1,640.8	1,689.3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59.6)	(60.1)	(60.7)	(60.8)	(60.6)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전망

(단위: 경상GDP 대비, %)



주: *는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20.9.) 중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2030년 국가채무(2,229조원)의 경상GDP 대비 비율임

Ⅲ.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정책 변화

- 중기재정전망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므로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총수입 변화, 그리고 총지출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가능
 - 기준전망은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 시점(2021.9.3.)의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전망치

- 기준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국세수입: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등(2021년 8월에 발표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세수변화 포함)
 - 국세외수입: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
 - 의무지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대상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 재량지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 반영
 - 기준전망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 반영

주요 정책 변화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세법개정안」 등에 따른 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고용중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일몰연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현행 21% → 2022년 23.7% → 2023년 25.3%) ○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세감면 제도는 향후 일몰도래시 일몰기한이 연장됨을 가정 - 2021년 일몰도래하는 대표적인 조세특례 항목: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국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021.9.1.)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1.6% → 1.8% - (예술인, 노무제공자) 1.4% → 1.6%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대로 수입에 연동되는 가입자지원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보험료율 6.99%로 인상(2021년 6.86%)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대로 수입에 연동되는 가입자지원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보험료율 12.27%로 인상(2021년 11.52%)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중 2022년에 시행되는 정책 반영(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월 한도액 증액,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4개월제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현행 50% → 2022년 80%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 ○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적용 제외(2022.1.1.) ○ (주거급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대상 ○ (아동수당) 지원범위 확대(20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 확대

2.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재정 영향

가. 총수입

-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의 총수입이 기준전망보다 10년 동안 61.9조원 낮고, 세입확충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2023년부터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므로 기준전망보다 10년 동안 267.8조원 높은 전망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지출통제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세입확충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정책조합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기준전망(B)	526.4	557.2	576.2	600.9	626.5	650.8	674.1	699.8	725.9	752.2	4.0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5.1	-6.5	-7.4	-7.4	-6.5	-6.8	-7.1	-7.4	-7.7	-61.9
지출통제	0.0	-5.1	-6.5	-7.4	-7.4	-6.5	-6.8	-7.1	-7.4	-7.7	-61.9
세입확충	0.0	-5.1	15.5	15.4	16.2	42.3	43.7	45.1	46.6	48.0	267.8
정책조합	0.0	-5.1	15.5	15.4	16.2	42.3	43.7	45.1	46.6	48.0	267.8

- 국세수입의 경우 정부 세법개정안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 기준전망보다 10년 동안 49.3조원 낮을 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준)
 - (소득세)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의 세수효과 반영(10년 동안 2.8조원 감소)
 - (법인세)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의 세수효과 반영(10년 동안 4.3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효과 반영(10년 동안 42.7조원 감소)
 - (기타 세목) 10년 동안 0.4조원 증가
- 국세외수입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폭과 시기가 달라져 기준전망보다 10년 동안 14.6조원 낮을 전망
-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0.2%p 인상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 반영(2022년 7월 1일 인상)
 - 기준전망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에 2021년 대비 0.2%p, 2023년에 2022년 대비 0.1%p, 2024년에 2023년 대비 0.1%p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나. 총지출

-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이 기준전망보다 10년 동안 113.8조원 높고,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경우는 2026년부터 재량지출을 동결하므로 기준전망보다 10년 동안 77.6조원 낮을 전망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609.9	614.0	636.7	668.5	698.4	730.2	760.6	790.3	823.3	857.1	3.9
지출통제	609.9	614.0	636.7	668.5	698.4	718.2	736.1	752.6	771.7	791.4	2.9
세입확충	609.9	614.0	636.5	667.9	697.2	728.4	757.9	786.7	818.8	851.6	3.8
정책조합	609.9	614.0	636.5	667.9	697.2	716.4	733.4	749.0	767.2	785.9	2.9
기준전망(B)	609.9	615.6	633.7	657.3	685.0	714.6	744.2	773.1	804.7	837.2	3.6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1.6	3.0	11.3	13.3	15.6	16.4	17.2	18.6	20.0	113.8
지출통제	0.0	-1.6	3.0	11.3	13.3	3.6	-8.1	-20.5	-33.0	-45.7	-77.6
세입확충	0.0	-1.6	2.8	10.6	12.2	13.8	13.7	13.7	14.1	14.5	93.8
정책조합	0.0	-1.6	2.8	10.6	12.2	1.8	-10.8	-24.0	-37.5	-51.2	-97.6

-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경우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하므로 현상유지 시나리오보다 감소(10년 동안 20.0조원)
 -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도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하므로 지출통제 시나리오보다 감소(10년 동안 20.0조원)
- 의무지출의 경우 복지 분야 의무지출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 기준전망보다 10년 동안 30.9조원 높을 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준)
- 의무지출의 차이는 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등에서 발생
 - (복지 분야 의무지출)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10년 동안 22.5조원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대상자 확대 등(10년 동안 8.4조원 증가), 아동수당 확대(10년 동안 2.4조원 증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등(10년 동안 2.1조원 증가) 등
 -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 등과 연동되어 있으며, 중기재정 전망의 내국세 등이 기준전망보다 낮음(10년 동안 19.9조원 감소)
- 재량지출의 경우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82.9조원 높을 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준)
- 이러한 차이는 기준전망의 재량지출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을 반영한 것에서 기인
 - (중기재정전망)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2026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준)
 - (기준전망) 2021년은 2021년 추경(2회),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2025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는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이 기준전망 대비 10년 동안 102.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

다.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기준전망에 비해 2030년 기준으로 경상GDP 대비 1.0%p 악화될 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준)
 - 지출통제 또는 세입확충의 정책 대안을 반영한 시나리오의 경우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기준전망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2030년 기준 1.2~3.6%p 개선)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83.5	-61.9	-67.1	-75.0	-79.3	-85.9	-93.2	-97.6	-104.8	-112.6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5)	(-3.7)	(-3.7)	(-3.9)	(-4.0)	
지출통제	-83.5	-61.9	-67.1	-75.0	-79.3	-73.9	-68.7	-59.9	-53.2	-46.9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0)	(-2.7)	(-2.3)	(-2.0)	(-1.7)	
세입확충	-83.5	-61.9	-44.8	-51.5	-54.6	-35.3	-40.1	-41.8	-46.3	-51.3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4)	(-1.6)	(-1.6)	(-1.7)	(-1.8)	
정책조합	-83.5	-61.9	-44.8	-51.5	-54.6	-23.3	-15.6	-4.1	5.2	14.4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0)	(-0.6)	(-0.2)	(0.2)	(0.5)	
기준전망(B)	-83.5	-58.4	-57.5	-56.3	-58.5	-63.8	-70.1	-73.3	-78.8	-84.9	
(GDP 대비 비율)	(-4.1)	(-2.7)	(-2.6)	(-2.5)	(-2.5)	(-2.6)	(-2.8)	(-2.8)	(-2.9)	(-3.0)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3.5	-9.6	-18.7	-20.8	-22.1	-23.2	-24.3	-26.0	-27.7	-175.7
(GDP 대비 비율)	(0.0)	(-0.2)	(-0.4)	(-0.8)	(-0.9)	(-0.9)	(-0.9)	(-0.9)	(-1.0)	(-1.0)	
지출통제	0.0	-3.5	-9.6	-18.7	-20.8	-10.1	1.3	13.4	25.6	38.0	15.7
(GDP 대비 비율)	(0.0)	(-0.2)	(-0.4)	(-0.8)	(-0.9)	(-0.4)	(0.1)	(0.5)	(0.9)	(1.4)	
세입확충	0.0	-3.5	12.7	4.8	3.9	28.5	30.0	31.4	32.5	33.6	174.0
(GDP 대비 비율)	(0.0)	(-0.2)	(0.6)	(0.2)	(0.2)	(1.2)	(1.2)	(1.2)	(1.2)	(1.2)	
정책조합	0.0	-3.5	12.7	4.8	3.9	40.5	54.5	69.1	84.1	99.3	365.4
(GDP 대비 비율)	(0.0)	(-0.2)	(0.6)	(0.2)	(0.2)	(1.7)	(2.2)	(2.6)	(3.1)	(3.6)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통합재정수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119.2	-99.9	-111.7	-119.0	-123.4	-129.8	-137.2	-144.2	-150.9	-158.4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5.3)	(-5.4)	(-5.5)	(-5.6)	(-5.7)	
지출통제	-119.2	-99.9	-111.7	-119.0	-123.4	-117.8	-112.7	-106.5	-99.3	-92.7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4.8)	(-4.5)	(-4.1)	(-3.7)	(-3.3)	
세입확충	-119.2	-99.9	-89.5	-95.5	-98.7	-79.2	-84.1	-88.4	-92.4	-97.2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3.2)	(-3.3)	(-3.4)	(-3.4)	(-3.5)	
정책조합	-119.2	-99.9	-89.5	-95.5	-98.7	-67.2	-59.6	-50.7	-40.8	-31.5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2.8)	(-2.4)	(-1.9)	(-1.5)	(-1.1)	
기준전망(B)	-119.2	-99.1	-103.2	-102.4	-104.7	-109.9	-116.4	-122.4	-127.6	-133.6	
(GDP 대비 비율)	(-5.8)	(-4.7)	(-4.7)	(-4.5)	(-4.4)	(-4.5)	(-4.6)	(-4.7)	(-4.7)	(-4.8)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0.9	-8.5	-16.6	-18.7	-19.8	-20.8	-21.8	-23.3	-24.8	-155.1
(GDP 대비 비율)	(0.0)	(-0.0)	(-0.4)	(-0.7)	(-0.8)	(-0.8)	(-0.8)	(-0.8)	(-0.9)	(-0.9)	
지출통제	0.0	-0.9	-8.5	-16.6	-18.7	-7.9	3.7	15.9	28.3	40.9	36.3
(GDP 대비 비율)	(0.0)	(-0.0)	(-0.4)	(-0.7)	(-0.8)	(-0.3)	(0.1)	(0.6)	(1.0)	(1.5)	
세입확충	0.0	-0.9	13.7	6.9	6.0	30.7	32.3	34.0	35.2	36.5	194.6
(GDP 대비 비율)	(0.0)	(-0.0)	(0.6)	(0.3)	(0.3)	(1.3)	(1.3)	(1.3)	(1.3)	(1.3)	
정책조합	0.0	-0.9	13.7	6.9	6.0	42.7	56.9	71.7	86.8	102.2	386.0
(GDP 대비 비율)	(0.0)	(-0.0)	(0.6)	(0.3)	(0.3)	(1.7)	(2.3)	(2.7)	(3.2)	(3.7)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라. 국가채무

-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 기준 78.9%로 기준전망에 비해 2030년 기준

으로 5.7%p 상승할 것으로 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 기준)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2.3%로 기준전망보다 0.8%p 하락
- 2023년부터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67.1%로 기준전망 대비 6.1%p 하락
- 지출통제 및 세입확충의 정책을 조합하는 정책조합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60.6%로 기준전망보다 12.6%p 하락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75.4	1,712.3	1,867.4	2,029.5	2,198.8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5)	(67.8)	(71.6)	(75.2)	(78.9)
지출통제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64.0	1,677.6	1,796.8	1,909.9	2,016.7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1)	(66.5)	(68.9)	(70.8)	(72.3)
세입확충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65.6	1,551.9	1,654.0	1,760.4	1,871.4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60.0)	(61.5)	(63.4)	(65.2)	(67.1)
정책조합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54.2	1,517.2	1,583.4	1,640.8	1,689.3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59.6)	(60.1)	(60.7)	(60.8)	(60.6)
기준전망(B)	965.9	1,067.6	1,172.0	1,281.2	1,390.1	1,504.4	1,622.3	1,756.0	1,895.3	2,040.3
(GDP 대비 비율)	(47.3)	(50.2)	(53.1)	(56.1)	(58.9)	(61.6)	(64.3)	(67.3)	(70.2)	(73.2)
차 이(A-B)										
현상유지	0.0	5.0	13.2	29.4	51.0	70.9	90.0	111.4	134.2	158.5
(GDP 대비 비율)	(0.0)	(0.2)	(0.6)	(1.3)	(2.2)	(2.9)	(3.6)	(4.3)	(5.0)	(5.7)
지출통제	0.0	5.0	13.2	29.4	51.0	59.6	55.3	40.8	14.6	-23.6
(GDP 대비 비율)	(0.0)	(0.2)	(0.6)	(1.3)	(2.2)	(2.4)	(2.2)	(1.6)	(0.5)	(-0.8)
세입확충	0.0	5.0	-4.7	-8.8	-10.7	-38.9	-70.4	-102.1	-134.9	-168.9
(GDP 대비 비율)	(0.0)	(0.2)	(-0.2)	(-0.4)	(-0.5)	(-1.6)	(-2.8)	(-3.9)	(-5.0)	(-6.1)
정책조합	0.0	5.0	-4.7	-8.8	-10.7	-50.3	-105.1	-172.6	-254.5	-351.0
(GDP 대비 비율)	(0.0)	(0.2)	(-0.2)	(-0.4)	(-0.5)	(-2.1)	(-4.2)	(-6.6)	(-9.4)	(-12.6)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IV. 요약 및 결론

- 본 보고서의 재정전망은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NABO의 전망과 정부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수행
 - 전망기간 동안 인구 흐름이나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정부 정책 및 그 기초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전망 결과는 달라짐
 - 이번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현상유지 시나리오)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30년 78.9%로 증가
 - (지출통제 시나리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부터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2.3%로 전망
 - (세입확충 시나리오) 2023년부터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7.1%로 전망
 - 2023년과 2026년 조세부담률을 각 1%p 단계적으로 인상
 - (정책조합 시나리오) 지출통제와 세입확충 정책을 조합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0.6%로 전망

- 중기재정전망 결과,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 비율(80.9%, 2019년 D2 기준 단순평균)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다만,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거나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큰 상대적 이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만약,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 필요

- 끝으로, 본 보고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세수효과 및 추가재정소요를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추정
 -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2021.9.3.)의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준전망과 비교한 결과, 중기재정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총수입은 기준전망 대비 10년 동안 61.9조원 낮고, 총지출은 113.8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 2030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경상GDP 대비 1.0%p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7%p 상승
 - 재량지출 수준을 동결하거나 조세부담률 인상을 통해 세입을 추가로 확충할 경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모두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I. NABO 중기재정전망의 개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2년도 예산안」(이하 예산안) 및 향후 5개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규모는 548.8조원,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하였다. 2021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66.2조원(13.7%), 총지출은 46.4조원(8.3%) 증가한 규모이다.¹⁾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중기적 시계에서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1년 965.9조원(정부의 경상GDP 대비 47.3%)에서 2025년 1,408.5조원(정부의 경상GDP 대비 58.8%)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을 전망한다.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거시경제 상황, 재정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여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2021~2030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이하 중기재정전망)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전망치를 제시한다. 시나리오별 실현가능성은 서로 다르며, 어떠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재정 모습은 달라진다.

또한, NABO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

1) 2022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감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2회)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34.3조원(6.7%) 증가하며, 총지출은 0.5조원(△0.1%) 감소한다.

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치인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들의 세수효과 및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한다. 이때 기준전망은 2022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시점(2021.9.3.)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중기재정전망은 인구구조의 변화처럼 장기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장기재정전망²⁾과 달리 정부의 중기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와 재정운용 목표 및 전략 등을 반영하므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1장에서 중기재정전망의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등 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를 간략히 언급하고, 중기재정전망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시나리오별 재정총량뿐 아니라 주요 전망항목별 전망 방법과 결과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재정총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4장에서는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요약하고, 부록에서는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를 설명하며, 미국과 영국의 중기재정전망 사례를 소개한다.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주요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2019.3.)의 2021~2030년 추계치(중위 가정)를 사용한다.³⁾

- 2) 「국가재정법」 제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3)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에 이어 2018년 0.98명까지 1명 이하로 감소하자 기존(2016년)의 5년 주기 장래인구추계를 앞당겨 발표하였다. 다만, 동 추계는 최근의 추이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 추계의 2021년 출생아 수는 29만명으로 전망되나, 실제 출생아 수는 2020년에 이미 27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통계청은 새로운 장래인구추계를 2021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재정전망에 적용한 총 인구 수는 2021년 5,182만명에서 2030년 5,193만명으로 11만명이 증가하지만 총 인구 수 증가율은 0.1% 미만이다. 특히, 2029년의 총 인구 증가율이 0% 미만으로 낮아져 총 인구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2021년에 29만명(합계출산율 0.86명)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2030년 36만명(합계출산율 1.14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0~5세 영유아 수는 2021년 207만명에서 2030년 206만명으로 연평균 0.05%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854만명에서 2030년 1,298만명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전망인데, 이와 같은 65세 이상 인구(노인)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도 2021년 16.5%에서 2030년 25.0%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에 이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3%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인구 수(만명)	5,182	5,185	5,187	5,189	5,191	5,192	5,193	5,194	5,194	5,193
총 인구 증가율(%)	0.08	0.05	0.04	0.04	0.03	0.03	0.02	0.02	-0.00	-0.03
출생아 수(만명)	29	30	31	32	34	35	36	36	36	36
합계출산율(명)	0.86	0.90	0.93	0.97	1.00	1.04	1.08	1.11	1.13	1.14
0~5세 인구 수(만명)	207	193	184	181	181	184	189	195	201	206
0~5세 인구 비중(%)	4.0	3.7	3.6	3.5	3.5	3.5	3.6	3.8	3.9	4.0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854	897	945	994	1,051	1,111	1,159	1,212	1,252	1,298
65세 이상 인구 비중(%)	16.5	17.3	18.2	19.2	20.3	21.4	22.3	23.3	24.1	25.0
사망자 수(만명)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21~2030년 거시경제 전망치를 사용한다.⁵⁾ 주요 거시경제변수로는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실업률, 소비자물가

4)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상승률, 금리, GDP디플레이터 등이 포함된다. 아래 표는 2021~2030년 기간 중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평균
실질GDP 성장률	4.1	3.0	2.5	2.3	2.2	2.1	2.1	2.1	2.1	2.0	2.5
경상GDP 성장률	5.6	4.2	3.7	3.5	3.4	3.4	3.4	3.4	3.4	3.3	3.7
실업률	4.0	3.9	3.9	3.9	3.8	3.8	3.8	3.8	3.8	3.9	3.9
취업자 수 증가율	0.8	1.0	0.8	0.7	0.7	0.7	0.6	0.5	0.3	0.1	0.6
소비자물가상승률	2.1	1.6	1.6	1.5	1.5	1.5	1.5	1.5	1.5	1.5	1.6
국고채금리(3년 만기)	1.3	1.8	2.1	1.9	1.7	1.5	1.5	1.5	1.5	1.5	1.6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5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주: 평균은 2021~2030년 단순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먼저, 실질GDP 성장률은 2021~2030년 기간 중 연평균 2.5%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이전 10년(2011~2020년) 기간 중 실질GDP 성장률의 실적치인 연평균 2.6%(2011~2019년 2.9%)와 비교해서 0.1%p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2020년 $\Delta 0.9\%$ 를 제외하면 0.3%p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 경로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4.1%를 기록하고, 2022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강화되어 3.0%를 보일 전망이다. 그 이후 실질GDP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 GDP 수준에 부합하는 경로로 회귀하며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 2030년에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GDP 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합산하여 전망하였다. 2021~2030년 기간 중 경상GDP 성장률은 연평균 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경기회복세와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으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5%의 높은 수준을 보여 경상GDP 성장률은 5.6%를 기록할 것으로

5) NABO는 매년 발표하는 5년 전망(「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10년으로 확장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였으며, 이를 동 보고서에 사용하였다.

전망된다.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2030년에는 3.3%로 낮아질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경상GDP 성장률의 추이는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2~1.3% 범위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질GDP 성장률의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둔화, 베이비붐 세대의 65세 이상 고령층 진입 본격화에 따른 15~64세 인구의 감소 지속 등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21년 4.0%에서 2025년 3.8%로 완만히 하락하겠지만 성장률 둔화와 고령층의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전 5년 기간(2016~2020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평균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주요 대면서비스업종과 제조업 등에서 온라인 소비활동 및 자동화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관련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2030년 기간 중 평균 1.6%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2021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물가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업제품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2.1% 상승할 전망이다. 2022년에는 민간소비 확대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 보다는 낮은 1.6%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3년부터는 국제유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요압력이 약화되며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2.0%) 수준을 하회하는 1.5%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2022~2023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1년에 이어 국내외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21년 1.3%보다 높은 각각 1.8%, 2.1%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 경상GDP(계절조정)의 최근 4개 분기(2020.3/4분기~2021.2/4분기)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 추세의 기울기가 높아져 실물경제 성장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개선세는 경제주체의 자금수요 증가로 이어져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물가안정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2030년 중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2.0~2.3%,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고채금리도 1.5~1.9% 구간에서 완만히 하락세를 보이며, 2021~2030년 평균 1.6%를 나타낼 전망이다.

3. 전망 시나리오

재정전망 작업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미래 상황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뿐 아니라 전망 당시의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향후 재정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여부 등에 따라 그 전망치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개년(2021~2025년)에 대한 계획이나, 중기재정전망은 10년(2021~2030년) 동안의 재정총량을 전망하므로 2026년 이후의 상황은 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NABO는 중기재정전망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을 전망하고자 한다.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되, 시나리오별로 정책 대안을 반영하여 총지출 또는 총지출 규모를 수정한 것이다. 각 시나리오는 실현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나, NABO는 특정 시나리오의 실현에 대해 권고하거나 정책적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표 3] 중기재정전망의 네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주요 내용
현상유지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 세법개정안,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반영 - (총지출)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 반영 ※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증가율은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짐작(2026~2029년은 매년 3.4%, 2030년은 3.3%)
지출통제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년 재량지출(348.4조 원) 수준과 동일하게 가정
세입확충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조세부담률 1%p 인상, 2026년 추가로 1%p 인상
정책조합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가정

첫째,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총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세법개정안, 사회보험 보험료를 인상 계획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변화를 반영하며,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계획을 반영한다. 재량지출의 경우 2021~2025년의 기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점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3.4%, 2030년은 3.3%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량지출 수준은 2021년은 추경(2회) 기준으로 325.8조원, 2022년은 예산안 기준으로 303.3조원(전년 대비 △6.9%), 2023년은 323.0조원(6.5%), 2024년은 336.2조원(4.1%), 2025년은 348.4조원(3.6%)이다. 계획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재량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나, 여전히 3% 중반 수준으로 2026년 이후에도 이러한 수준이 유지될 경우 NABO의 경상GDP 성장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04.9	604.4	634.7	663.2	691.1	3.4
의무지출	279.1	301.1	311.7	327.0	342.7	5.3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1.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총지출 대비 비중)	(53.9)	(50.2)	(50.9)	(50.7)	(50.4)	

주: 2021년은 추경(2회) 기준임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둘째, 지출통제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수준을 동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21~2025년 기간 동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게 하되, 2026년 이후는 2025년 수준(348.4조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동 시나리오에서 지출통제의 방법을 재량지출 동결로 한정하는 이유는 의무지출의 경우 지출 대상과 규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지출이므로 관

런 법령의 제·개정 없이는 지출 수준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재량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현상유지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지출통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셋째, 세입확충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최근 조세부담률 추이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고, 2026년에 추가적으로 1%p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⁶⁾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면 국세수입은 경상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는데, 국세수입의 증가분은 지방이전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목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NABO는 특정 세목의 신설 또는 특정 세목의 세율 변화 등을 권고하거나 정책적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⁷⁾

참고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국세와 지방세 합계를 경상GDP로 나눈 값)은 2020년 기준으로 20.0%(잠정) 수준이다.

[표 6]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실적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세부담률	18.3	18.8	19.9	19.9	20.0*	20.2	20.7	20.7	20.7	20.6

주: *잠정치임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참고로,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20.9.)에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 대안으로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를 가정한 바 있다.

7) 조세부담률 인상을 위한 방안으로 세율 인상,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한 것으로,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수준을 동결하고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출통제 시나리오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지출 수준을 통제하고, 세입확충 시나리오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세입을 확충하는 대안이라면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지출과 세입 모든 측면에서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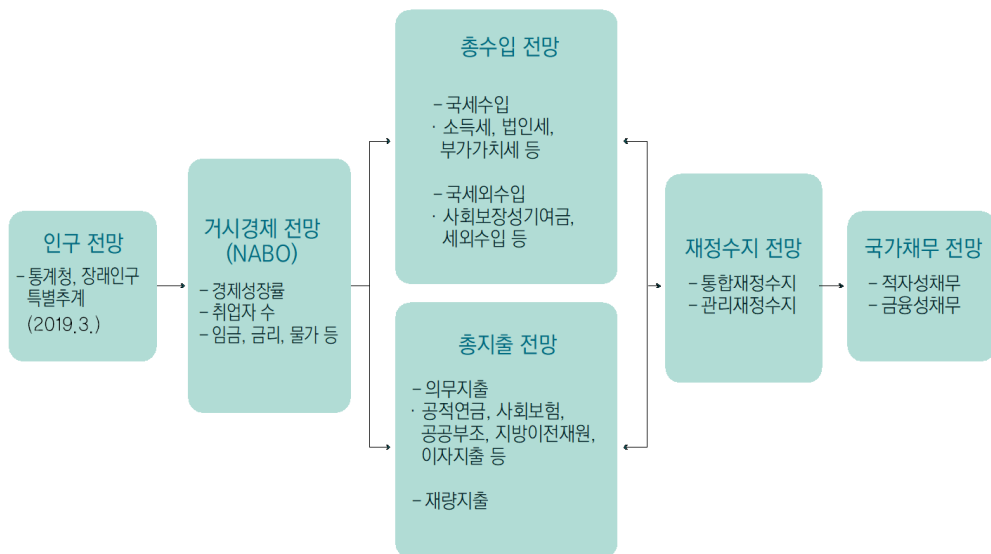
II. NABO 중기재정전망

1. 전망 절차

NABO의 중기재정전망 흐름을 보면, 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시나리오별 재정총량 전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하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국세외수입은 다시 사회보장기여금과 세외수입으로 구분한다. 국세수입은 세목별로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기금수입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기여금 수입과 기금운용수익, 기타수입 등 모든 수입항목에 대해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그림 1]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며, 의무지출은 법령에서 지출요건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야별·세부사업별로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총량 수준에서 전망한다. 의무지출 분야는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하며, 복지 분야는 다시 사회보험, 공적연금, 공공부조, 기타 복지지출로 구분한다.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입과 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전망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관리재정수지의 규모에 따라 국고채 이자지출과 국가채무(적자성 채무) 규모를 각각 전망한다.

2.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시나리오별 재정총량에 대한 전망 결과를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7.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1년 $\Delta 4.1\%$ 에서 2030년 $\Delta 4.0\%$ 로 전망되며,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30년 78.9%로 전망된다.

[표 7]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GDP 대비 비율)	(25.8)	(26.0)	(25.8)	(26.0)	(26.2)	(26.4)	(26.4)	(26.5)	(26.6)	(26.7)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5.1	3.9
(전년 대비 증가율)		(5.5)	(1.9)	(4.2)	(4.3)	(4.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7	668.5	698.4	730.2	760.6	790.3	823.3	857.1	3.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6)	(29.9)	(30.1)	(30.3)	(30.5)	(30.7)	
의무지출	284.1	310.7	313.8	332.3	350.0	370.0	388.1	405.2	425.1	445.8	5.1
(전년 대비 증가율)		(9.4)	(1.0)	(5.9)	(5.3)	(5.7)	(4.9)	(4.4)	(4.9)	(4.9)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통합재정수지	-83.5	-61.9	-67.1	-75.0	-79.3	-85.9	-93.2	-97.6	-104.8	-112.6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5)	(-3.7)	(-3.7)	(-3.9)	(-4.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111.7	-119.0	-123.4	-129.8	-137.2	-144.2	-150.9	-158.4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5.3)	(-5.4)	(-5.5)	(-5.6)	(-5.7)	
국가채무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75.4	1,712.3	1,867.4	2,029.5	2,198.8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5)	(67.8)	(71.6)	(75.2)	(78.9)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지출통제 시나리오는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2025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므로 총지출이 현상유지 시나리오보다 감소한다.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91.4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이 감소하여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 또한 2030년에 72.3%로 전망된다.

[표 8]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GDP 대비 비율)	(25.8)	(26.0)	(25.8)	(26.0)	(26.2)	(26.4)	(26.4)	(26.5)	(26.6)	(26.7)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5.1	3.9
(전년 대비 증가율)		(5.5)	(1.9)	(4.2)	(4.3)	(4.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7	668.5	698.4	718.2	736.1	752.6	771.7	791.4	2.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6)	(29.4)	(29.2)	(28.8)	(28.6)	(28.4)	
의무지출	284.1	310.7	313.8	332.3	350.0	369.8	387.7	404.2	423.4	443.1	5.1
(전년 대비 증가율)		(9.4)	(1.0)	(5.9)	(5.3)	(5.7)	(4.8)	(4.3)	(4.7)	(4.7)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83.5	-61.9	-67.1	-75.0	-79.3	-73.9	-68.7	-59.9	-53.2	-46.9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0)	(-2.7)	(-2.3)	(-2.0)	(-1.7)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111.7	-119.0	-123.4	-117.8	-112.7	-106.5	-99.3	-92.7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4.8)	(-4.5)	(-4.1)	(-3.7)	(-3.3)	
국가채무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64.0	1,677.6	1,796.8	1,909.9	2,016.7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1)	(66.5)	(68.9)	(70.8)	(72.3)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세입확충 시나리오는 2023년에 조세부담률을 1%p 인상하고 2026년에 추가로 1%p 인상하는 것으로 총수입이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증가한다.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총수입이 증가하여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 또한 2030년에 67.1%로 전망된다.

재량지출 수준을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음에도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총지출이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다른 이유는 조세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표 9]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GDP 대비 비율)	(25.8)	(26.0)	(26.8)	(27.0)	(27.2)	(28.4)	(28.4)	(28.5)	(28.6)	(28.7)	
국세수입	323.0	340.9	369.4	384.9	401.1	443.1	458.3	475.6	493.2	510.9	5.2
(전년 대비 증가율)		(5.5)	(8.4)	(4.2)	(4.2)	(10.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5	667.9	697.2	728.4	757.9	786.7	818.8	851.6	3.8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5)	(29.8)	(30.0)	(30.1)	(30.3)	(30.6)	
의무지출	284.1	310.7	313.6	331.7	348.9	368.2	385.5	401.6	420.6	440.3	5.0
(전년 대비 증가율)		(9.4)	(0.9)	(5.8)	(5.2)	(5.5)	(4.7)	(4.2)	(4.7)	(4.7)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통합재정수지	-83.5	-61.9	-44.8	-51.5	-54.6	-35.3	-40.1	-41.8	-46.3	-51.3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4)	(-1.6)	(-1.6)	(-1.7)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89.5	-95.5	-98.7	-79.2	-84.1	-88.4	-92.4	-97.2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3.2)	(-3.3)	(-3.4)	(-3.4)	(-3.5)	
국가채무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65.6	1,551.9	1,654.0	1,760.4	1,871.4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60.0)	(61.5)	(63.4)	(65.2)	(67.1)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하는 것으로 총수입은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85.9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총수입이 증가하고 총지출은 감소하여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 또한 2030년에 60.6%로 전망된다.

재량지출 수준을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음에도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총지출이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다른 이유는 조세부담률의 단계적 인상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표 10]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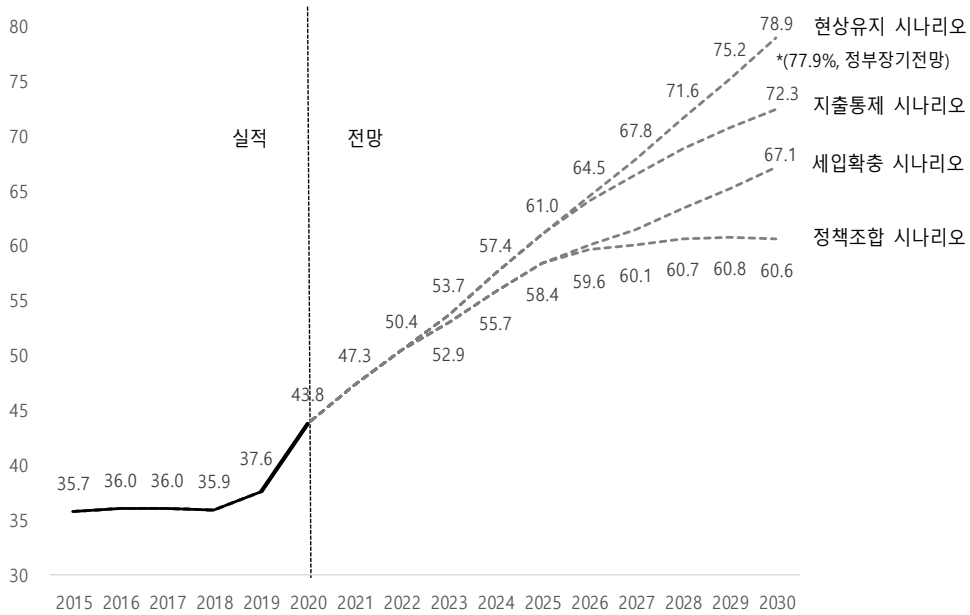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GDP 대비 비율)	(25.8)	(26.0)	(26.8)	(27.0)	(27.2)	(28.4)	(28.4)	(28.5)	(28.6)	(28.7)	
국세수입	323.0	340.9	369.4	384.9	401.1	443.1	458.3	475.6	493.2	510.9	5.2
(전년 대비 증가율)		(5.5)	(8.4)	(4.2)	(4.2)	(10.5)	(3.4)	(3.8)	(3.7)	(3.6)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전년 대비 증가율)		(3.8)	(5.3)	(4.2)	(4.3)	(3.5)	(3.8)	(3.8)	(3.7)	(3.6)	
총지출	609.9	614.0	636.5	667.9	697.2	716.4	733.4	749.0	767.2	785.9	2.9
(GDP 대비 비율)	(29.9)	(28.9)	(28.9)	(29.3)	(29.5)	(29.4)	(29.1)	(28.7)	(28.4)	(28.2)	
의무지출	284.1	310.7	313.6	331.7	348.9	368.1	385.1	400.7	418.8	437.6	4.9
(전년 대비 증가율)		(9.4)	(0.9)	(5.8)	(5.2)	(5.5)	(4.6)	(4.0)	(4.5)	(4.5)	
재량지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83.5	-61.9	-44.8	-51.5	-54.6	-23.3	-15.6	-4.1	5.2	14.4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0)	(-0.6)	(-0.2)	(0.2)	(0.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GDP 대비 비율)	(1.7)	(1.8)	(2.0)	(1.9)	(1.9)	(1.8)	(1.7)	(1.8)	(1.7)	(1.6)	
관리재정수지	-119.2	-99.9	-89.5	-95.5	-98.7	-67.2	-59.6	-50.7	-40.8	-31.5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2.8)	(-2.4)	(-1.9)	(-1.5)	(-1.1)	
국가채무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54.2	1,517.2	1,583.4	1,640.8	1,689.3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59.6)	(60.1)	(60.7)	(60.8)	(60.6)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그림 2]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전망

(단위: 경상GDP 대비, %)



주: *는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20.9.) 중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2030년 국가채무(2,229조원)의 경상GDP 대비 비율임

3. 주요 항목별 전망 방법과 결과

가. 총수입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총수입 전망 결과는 동일하며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74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1년 25.8%에서 2030년 26.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에 각 1%p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총수입 전망 결과는 동일하며, 2021년 526.4조원에서 2030년 800.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는 2023년부터 1%p 높아지며, 2026년 이후는 2%p 상승한다.

[표 1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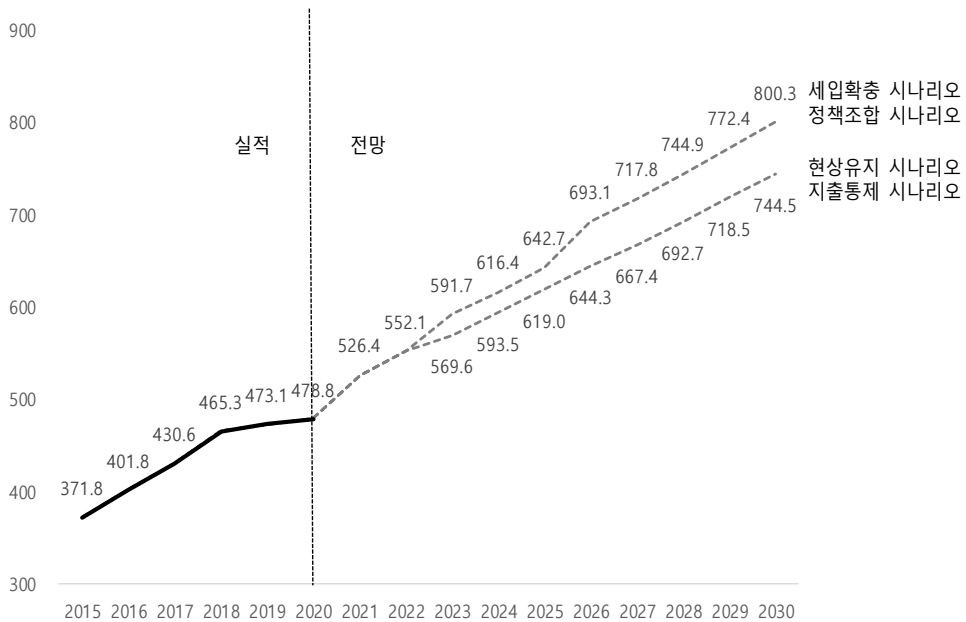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현상유지 (GDP 대비 비율)	526.4 (25.8)	552.1 (26.0)	569.6 (25.8)	593.5 (26.0)	619.0 (26.2)	644.3 (26.4)	667.4 (26.4)	692.7 (26.5)	718.5 (26.6)	744.5 (26.7)	3.9
지출통제 (GDP 대비 비율)	526.4 (25.8)	552.1 (26.0)	569.6 (25.8)	593.5 (26.0)	619.0 (26.2)	644.3 (26.4)	667.4 (26.4)	692.7 (26.5)	718.5 (26.6)	744.5 (26.7)	3.9
세입확충 (GDP 대비 비율)	526.4 (25.8)	552.1 (26.0)	591.7 (26.8)	616.4 (27.0)	642.7 (27.2)	693.1 (28.4)	717.8 (28.4)	744.9 (28.5)	772.4 (28.6)	800.3 (28.7)	4.8
정책조합 (GDP 대비 비율)	526.4 (25.8)	552.1 (26.0)	591.7 (26.8)	616.4 (27.0)	642.7 (27.2)	693.1 (28.4)	717.8 (28.4)	744.9 (28.5)	772.4 (28.6)	800.3 (28.7)	4.8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그림 3]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1)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현 조세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각 세목별로 기준전망을 하고, 여기에 금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다. 이때 세법개정안에는 포함

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2021년 8월에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⁸⁾의 세수효과 또한 전망에 반영하였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국세수입은 2021년 323.0조원에서 2030년 455.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동일하며, 세입확충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각 1%p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2023~2025년 기간 동안 국세수입은 매년 경상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고, 2026~2030년 기간 동안은 매년 경상GDP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한다. 다만, 국세수입 증가와 관련하여 세목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세목별 중기재정전망 결과에 대한 설명은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다.

[표 12]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323.0	340.9	347.4	362.0	377.5	394.3	407.8	423.4	439.2	455.1	3.9
(GDP 대비 비율)	(15.8)	(16.0)	(15.7)	(15.9)	(16.0)	(16.2)	(16.2)	(16.2)	(16.3)	(16.3)	
소득세	101.2	103.9	107.2	113.0	119.8	126.6	133.5	140.2	147.0	154.0	4.8
법인세	70.5	77.2	82.4	86.6	90.6	95.6	99.4	103.2	107.1	111.2	5.2
부가가치세	69.8	76.1	75.9	78.7	81.5	84.4	87.4	90.5	93.7	97.0	3.7
기타	81.6	83.7	81.8	83.7	85.7	87.7	87.5	89.5	91.3	93.0	1.5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함
 3.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가) 소득세

소득세 재정전망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각 세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명목임금상승률, 경상GDP 등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전망하였다.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

8) 정부는 2021년 8월 현재 2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2021.8.11.)하였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2021.9.13.)하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12230, 김영진의원안) 등을 논의 중이다.

모형을 이용하였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를 비롯하여 환율, 채권발행 잔액,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한 전망치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202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표 13]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명목임금상승률,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이자·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환율, 채권발행 잔액,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전망 결과, 소득세는 2021년 101.2조원에서 2030년 154.0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하락하고, 양도소득세 증가율도 이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법인세

법인세 전망은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각각을 전망하고 합산하여 추계하였다.

신고분 법인세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전망했다. 먼저 2021년 상반기까지 법인 실적과 8월까지의 누적 법인세 실적을 고려하여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1년의 신고분 법인세수를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경상GDP,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특이요인 반영한 더미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2030년까지의 신고분 법인세수를 전망하였다.

원천분 법인세는 8월까지의 누적 세수실적 및 금융여건을 반영하여 2021년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예금 및 채권 규모, 회사채 금리, 경상GDP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2030년까지 전망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한 신고분 및 원천분 법인세를 합산한 후, 국가전

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와 고용분야 세제지원 확대 등 202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분: 경상GDP, 원/달러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원천분: 경상GDP, 비금융법인의 비결제성 예금 및 채권, 회사채금리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전망 결과, 법인세는 2021년 70.5조원에서 2030년 111.2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2021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실적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법인세는 전년대비 15.0조원(2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후로도 수출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증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⁹⁾ 법인세수는 2030년 111.2조원까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재정전망은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한 전망치에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 202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표 1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9) 신고·납부 시차가 존재하는 법인세는 직전연도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 경상GDP 성장률: (2022년) 4.2% → (2026년) 3.4% → (2029년) 3.3%

· 통관수출액 증가율: (2022년) 4.2% → (2026년) 2.4% → (2029년) 2.2%

전망 결과, 부가가치세는 2021년 69.8조원에서 2030년 97.0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30년간 민간소비(연평균 3.7%)와 통관수입(연평균 2.7%)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부가가치세 증가율은 지난 5년(2016~2020년)간 연평균 증가율(1.2%)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라) 기타 세목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세목별 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또한,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부가세(surtax, 附加稅)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GDP 대비 비중이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치에 2021년 세법개정안과 증권거래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세목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상속세 및 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등 자산종류별 상속 및 증여가액 비중과 자산종류별 가격 상승률 대비 경상GDP 성장률의 탄력성, 향후 경상GDP 성장률 전망을 반영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상속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대기업 총수 사망 등으로 인한 우발세수(연간 2조원)를 고려하여 전망
개별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분 개별소비세는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향후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최근의 출고량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자동차분 개별소비세는 민간소비 등을 이용하여 전망
증권거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와 KOSDAQ 시장별 거래대금을 경상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된 후 시장별 세율 반영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GDP 성장률, 원화대출금 증가율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휘발유 및 경유의 향후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최근의 실효세율 추이,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

전망 결과, 기타 세목은 2021년 81.6조원에서 2030년 93.0조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관련 세수(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경우 유류소비 증가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 등을 감안하였으며, 자산 관련 세수(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부동산 및 주식시장 가격이 향후 안정화될 것으로 보았다.

(2)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중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수입(기여금, 기금운용수익 등)은 각 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동기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정부의 예산안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전망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전망 결과, 국세외수입은 2021년 203.3조원에서 2030년 289.4조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의 기여금 수입에 비해 공무원연금 및 군인 연금의 기여금 수입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공무원 등의 보수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표 17]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203.3	211.1	222.2	231.5	241.6	250.0	259.6	269.3	279.3	289.4	4.0
(GDP 대비 비율)	(10.0)	(9.9)	(10.1)	(10.1)	(10.2)	(10.2)	(10.3)	(10.3)	(10.3)	(10.4)	
사회보장기여금	75.7	80.1	84.6	87.7	91.3	95.0	98.7	102.6	106.5	110.6	4.3
국민연금	50.2	52.1	53.9	55.6	57.7	59.8	61.9	64.1	66.3	68.7	3.5
사학연금	3.7	3.7	3.8	3.8	3.9	4.1	4.2	4.5	4.6	4.8	3.0
고용보험	14.1	15.9	17.5	18.5	19.5	20.5	21.5	22.5	23.6	24.6	6.4
산재보험	7.7	8.4	9.3	9.8	10.2	10.6	11.1	11.6	12.0	12.5	5.6
연금기여금	15.3	16.5	17.4	18.2	19.4	19.6	20.3	20.9	21.5	21.9	4.1
공무원연금	14.5	15.8	16.7	17.5	18.6	18.8	19.5	20.1	20.6	21.1	4.2
군인연금	0.7	0.7	0.7	0.8	0.8	0.8	0.8	0.8	0.9	0.9	2.1
기타	112.4	114.5	120.3	125.5	130.9	135.4	140.5	145.8	151.3	156.9	3.8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국세외수입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3.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가)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보험료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은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분담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 부담금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수입(보험료율 9.0%)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료율 4.5%)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수입 중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4.5%)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9.0%)이다. 국민연금기여금은 가입자 유형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유형별 가입자 수는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성별에 따른 가입자 유형별 이동율, 연령별·성별 신규가입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연령별·성별·가입

자 유형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사학연금기여금 수입은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가입자의 직종은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하는데, 교원 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일정 시점에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직원 수는 연도별 교원 대비 일반 직원 비율 추정치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사학연금기여금 수입은 피고용자분담금과 고용주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피고용자분담금은 연금부담금 중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¹⁰⁾이고, 고용주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연금부담금¹¹⁾, 재해보상부담금¹²⁾, 퇴직수당부담금¹³⁾이 해당된다.

고용보험기여금 수입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수입으로,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보험료율 1.6%),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보험료율 0.25 ~ 0.85%).¹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4%이다. 고용보험기여금은 보험사업별 가입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추정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 이번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¹⁵⁾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계획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산재보험기여금 수입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수입으로, 산재보험료는 2021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0.1%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고용주부담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 개인의 기여금부담률은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이후 9%가 적용된다.

11) 법인의 연금부담금은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하고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분담하므로 직원보다 낮은 부담률인 2018년 5.0%, 2019년 5.147%, 2020년 이후 5.294%를 적용한다.

12) 재해보상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는데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의 4.54%를 적용한다.

13) 퇴직수당부담금은 예상퇴직인원에 퇴직수당 급여산식을 적용하여 구한 금액에 법인 부담률(대차소요액의 40%)을 곱하여 산출한다.

14) 자영업자인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이다.

1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1.9.1.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 산재보험기여금은 가입자의 보수총액에 평균 보험료를 등을 곱하여 추정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적용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다.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유형별 가입자 수와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성별에 따른 가입자 유형별 이동율, 연령·성별 신규가입률 등 고려하여 가입자 수 추계 - 기준소득월액은 연령·성별·가입자 유형별 소득분포를 등 고려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
사학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가입자 수와 기준소득월액,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 ○ 가입자 수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일정 시점에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 - 직원 수는 연도별 교원 대비 일반 직원 비율 추정치를 적용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반영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021.9.1.)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1.6% → 1.8% - (예술인, 노무제공자) 1.4% → 1.6% ○ 자영업자 보험료율과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보수총액에 평균 보험료율을 곱하여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장의 경우 가입자 증가율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을 적용하며, 보수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평균 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기여금의 비율로 산출하며,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액에 근거하여 산출

주요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기여금은 2021년 50.2조원에서 2030년 68.7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의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하지만 가입자 수가 202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세로 전환되어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기여금은 2021년 3.7조원에서 2030년 4.8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여금부담률이 18%에 도달한 이후 고정되고 가입자 수도 교원의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여금은 2021년 14.1조원에서 2030년 24.6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한 결과 증가율이 다른 기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산재보험기여금은 2021년 7.7조원에서 2030년 12.5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금기여금

연금기여금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군인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기여금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부담률과 인원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여금부담률을 2015년 7%에서 2020년 9%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기여금부담률 인상 계획 없이 2013년부터 7%를 유지하고 있다. 가입자 수의 경우, 공무원은 증원계획에 따라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군인은 국방부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계급별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1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기여금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무원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3) 결과를 반영한 가입자 수 전망 -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적용 - 기여금부담률 9% 유지 ○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구성 - 각 항목별 총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금액의 비율(최근 5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추정)을 적용
군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수는 국방부의 연도별 군인 정원 적용 -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적용 - 기여금부담률 7% 유지

공무원연금기여금은 2021년 14.5조원에서 2030년 21.1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 계획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가 2022년까지는 다소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완만한 자연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기여금의 경우 2021년 0.7조원에서 2030년 0.9조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전망이다.

나. 총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857.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은 2021년 29.9%에서 2030년 3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수준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총지출은 2021년 609.9조원에서 2030년 791.4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확충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어 이자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각각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지출통제 시나리오에 비해 총지출 수준이 소폭 감소한다.

[표 20]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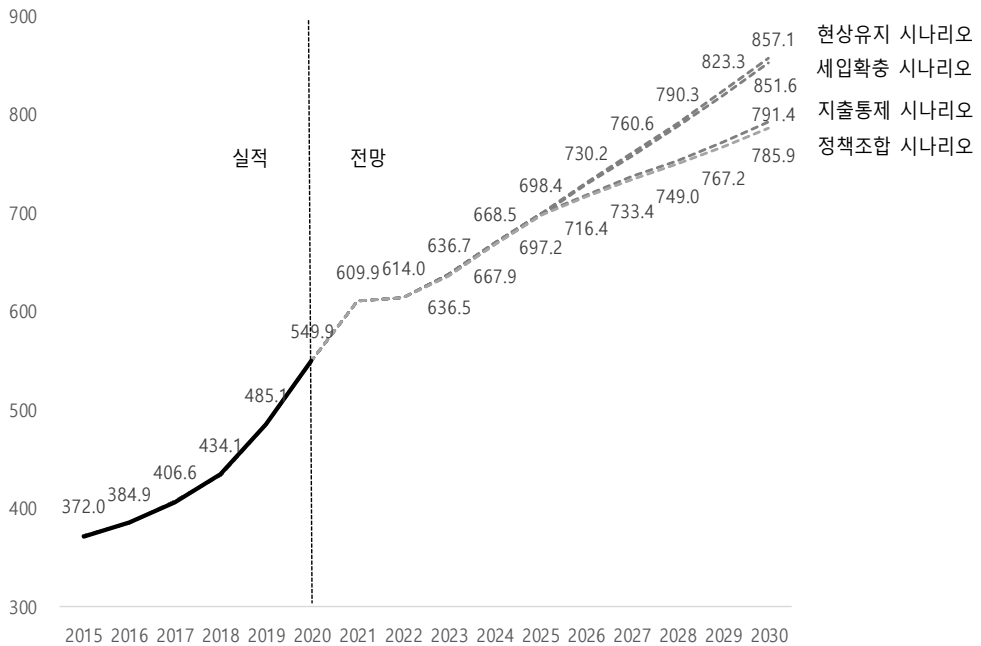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현상유지 (GDP 대비 비율)	609.9 (29.9)	614.0 (28.9)	636.7 (28.9)	668.5 (29.3)	698.4 (29.6)	730.2 (29.9)	760.6 (30.1)	790.3 (30.3)	823.3 (30.5)	857.1 (30.7)	3.9
지출통제 (GDP 대비 비율)	609.9 (29.9)	614.0 (28.9)	636.7 (28.9)	668.5 (29.3)	698.4 (29.6)	718.2 (29.4)	736.1 (29.2)	752.6 (28.8)	771.7 (28.6)	791.4 (28.4)	2.9
세입확충 (GDP 대비 비율)	609.9 (29.9)	614.0 (28.9)	636.5 (28.9)	667.9 (29.3)	697.2 (29.5)	728.4 (29.8)	757.9 (30.0)	786.7 (30.1)	818.8 (30.3)	851.6 (30.6)	3.8
정책조합 (GDP 대비 비율)	609.9 (29.9)	614.0 (28.9)	636.5 (28.9)	667.9 (29.3)	697.2 (29.5)	716.4 (29.4)	733.4 (29.1)	749.0 (28.7)	767.2 (28.4)	785.9 (28.2)	2.9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그림 4]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1)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되는데, 급여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등을 추정하여 전망한다. 이때 수급 요건과 지원단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지출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전망 결과, 의무지출은 2021년 284.1조원에서 2030년 445.8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1년 134.1조원에서 2030년 224.0조원까지 연평균 5.9% 증가할 전망이다. 이자지출은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인 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목적의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출통제 시나리오는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것이므로 의무지출의 전망 결과가 시나리오별로 동일하여야 하나, 시나리오별로 관리재정수지의 개선 정도가 달라 의무지출의 하나인 이자지출이 달라지므로 시나리오에 따라 의무지출의 전망 결과도 달라진다. 다만, 이자지출을 제외한 의무지출은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없고, 이자지출의 차이는 시나리오별로 크지 않으므로 의무지출별 전망 결과에 대한 설명은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다.

[표 21]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284.1	310.7	313.8	332.3	350.0	370.0	388.1	405.2	425.1	445.8	5.1
(GDP 대비 비율)	(13.9)	(14.6)	(14.2)	(14.6)	(14.8)	(15.2)	(15.4)	(15.5)	(15.8)	(16.0)	
복지 분야	134.1	144.8	151.2	161.7	172.0	182.7	193.1	201.3	212.3	224.0	5.9
지방이전재원	123.4	136.6	133.3	139.3	145.6	152.5	158.0	164.3	170.7	177.0	4.1
이자지출	17.9	19.1	21.2	23.0	25.1	27.3	29.4	31.7	34.0	36.4	8.2
기타	8.7	10.2	8.1	8.3	7.3	7.5	7.7	7.9	8.1	8.3	-0.4

-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함
 3.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가) 복지 분야 의무지출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지출로, 연금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국민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출로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급여는 해당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이때 수급자 수는 코호트 구조를 반영하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국민연금가입률, 사망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며 급여별 단가는 성별, 가입자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가는 가입자의 소득수준, 명목임금상승률, 가입기간 등에 대한 전망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사학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출로서 퇴직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성되며, 각각의 급여는 해당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이때 수급자 수는 성별, 직종별(교원 및 직원)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연금선택률,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며 급여별 단가는 성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물가상승률, 연금지급률, 가입기간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공무원연금급여는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추계한다. 가입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 후, 2020년 결산 기준 직종별·성별·재직기간별·연령별 퇴직률과 공무원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퇴직자 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선택률, 유유족률 등을 활용하여 퇴직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를 추계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2020년 결산 기준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망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상승하고, 퇴직연금, 유족연금은 2021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군인연금급여는 공무원연금과 유사하게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가입자 수는 국방부에서 제공한 군인의 계급별 정원과 동일하고,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구분하여 추계한다. 기수급자는 2020년 결산기준 급여별 수급자 수에 국방부에서 제공한 군인과 유족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자는 국방부의 전역예상인원 전망결과를 활용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2020년 결산 기준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망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상승하고, 퇴역연금, 유족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수 및 급여지출은 노령연금(조기, 완전, 감액, 특례),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수에 각 급여유형별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 ○ 각각에 대해서는 자체 전망모형 활용하여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전환되도록 코호트구조 반영하여 구축된 전망모형 적용
사학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지출액은 연금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분하여 산출 ○ 2016년에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기여율 및 부담률,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추계 ○ 각각에 대해서는 자체 전망모형 활용하여 추계
공무원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추계 ○ 가입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전망하고, 퇴직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신규 수급자 수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수급자 수는 2020년 말 기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공무원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적용하여 전망 ○ 급여지출액은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포함), 유족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포함),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
군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기수급자는 국방부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자는 국방부의 전역예상인원 전망을 활용 ○ 지출추계는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전환유족연금 포함)과 퇴직수당,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

복지 분야 의무지출 중 공적연금의 의무지출 전망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급여는 2021년 30.2조원에서 2030년 61.0조원으로 연평균 8.1%, 사학연금급여는 2021년 4.5조원에서 2030년 6.8조원으로 연평균 4.7%, 공무원연금급여는 2021년 19조원에서 2030년 31.2조원으로 연평균 5.7%, 군인연금급여는 2021년 3.6조원에서 2030년 5.0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공적연금 의무지출	57.2	62.7	65.5	71.4	76.8	82.3	88.0	91.1	97.3	104.0	6.9
국민연금	30.2	33.9	34.7	38.7	42.5	46.5	50.4	51.6	56.3	61.0	8.1
사학연금	4.5	4.9	5.1	5.3	5.6	5.8	6.1	6.4	6.6	6.8	4.7
공무원연금	19.0	20.2	21.9	23.5	24.7	25.8	27.2	28.7	29.8	31.2	5.7
군인연금	3.6	3.6	3.8	3.9	4.0	4.2	4.3	4.5	4.6	5.0	3.8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및 공무원·교원의 보험부담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지출로 구성되며, 연금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과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추계하되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납부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를 전망치를 곱하여 추계한다. 이때 건강보험 납부자수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가입자 유형별, 연령군별 인구 대비 납부자 수 비중을 곱하여 추계한다.¹⁶⁾

16)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수입 추계 결과의 타당성과 사회보험 재정수지 분석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도 별도로 추계결과에 포함하였다.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와 공단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경상GDP 대비 급여비 비중의 장래 증가율을 인구요인, 소득요인, 잔차요인과 보장성 강화 요인으로 구분하여 전망한 뒤, 국회예산정책처 경상GDP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정부지원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과 공무원·교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금,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에 대한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추계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망치를 곱하여 추계한다.

고용보험 의무지출 사업으로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이 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세부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로 구성된다. 의무지출 사업비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추계한다. 수급자 수의 경우, 구직급여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급여의 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에 근거한다. 2022년도 예산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의 단가를 조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산재보험 의무지출 사업으로는 산재보험급여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¹⁷⁾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로 구성된다. 의무지출 사업비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연간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는 산재 적용근로자 수에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을 반영하여 추정하며,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의 일반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급여단가는 최근 실적치에 근거한다.

예측치를 적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비의 장래 지출 수준을 전망한다. 공단 관리운영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대비 공단 관리운영비 비중의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한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21.1.26.)으로 장의비(葬儀費)라는 명칭이 장례비로 변경되었다.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 ○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납부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 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를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납부자수: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가입자 유형별, 연령군별 인구 대비 납부자 수 비중을 곱하여 추계 ○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인상률: (2021) 2.86%, (2022) 1.89%, 2023 이후 3.2%씩 인상. 단,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적용 - 정부지원비중 2022년 예산안 비율(14.3%) 유지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추계) 건강보험료 수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보험료율(12.27%) 유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 건강보험 재정전망 전망과 동일 가정 ○ 정부지원금 비중: 2022년 이후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20% 적용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별 수급자 수에 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수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구직급여),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모성보호육아지원) 등에 근거 - 급여의 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에 근거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별 수급자 수에 연간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급자 수는 산재 적용근로자 수에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을 반영(재해율 등은 2020년 수준이 전망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의 일반사망률) 반영 - 급여단가는 최근 실적치에 근거

전망 결과,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1년 10.8조원에서 2030년 19.8조원으로 연평균 7.0%,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21년 1.7조원에서 2030년 3.6조원으로 연평균 8.6%, 고용보험의 의무지출은 2021년 13.4조원에서 2030년 18.2조원으로 연평균 3.5%, 산재보험의 의무지출은 2021년 6.8조원에서 2030년 10.4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험 의무지출	32.6	35.1	36.6	38.8	41.1	43.5	45.5	47.8	49.8	52.0	5.3
건강보험	10.8	11.6	12.5	13.6	14.8	16.1	17.1	17.9	18.8	19.8	7.0
노인장기요양보험	1.7	2.1	2.2	2.4	2.6	2.9	3.1	3.2	3.4	3.6	8.6
고용보험	13.4	14.2	14.2	14.8	15.2	15.8	16.2	17.1	17.6	18.2	3.5
산재보험	6.8	7.3	7.7	8.0	8.4	8.7	9.2	9.6	10.0	10.4	4.9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사회보험 의무지출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의무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무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중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각 급여의 과거 실적치와 거시인구변수 등을 활용하여 급여항목별(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대상자 수 또는 대상 가구 수를 추정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기초연금은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을 위하여 국가 재원으로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이며,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0만원이다. 기초연금 지출은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1인당 평균 수급액을 곱하여 추계한다. 유형별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전체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전액 및 감액수급자 비중, 단독 및 부부 수급자 비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유형별 1인당 평균 수급액은 부부 수급자 감액률,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률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영유아보육 의무지출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0~2세반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으로 구성된다. 영유아보육 의무지출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영유아 수에 정부지원 시설 및 미지원

시설 이용률 등을 적용하여 시설유형별 영유아 수를 추정한 후, 각 연령별, 시설유형별 수급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수당으로,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출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를 추정한 후,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18세 이상 생계·의료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중전 3~6급)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장애수당 지출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장애인 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중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추정한 후,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에 연동된다. 장애인연금 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독 및 부부 수급자, 65세 이상 비중 등을 적용하여 유형별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유형별 1인당 평균 수급액을 곱하여 추계한다.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민기초 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급여항목별(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대상자 수 또는 대상가구 수를 추정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각 급여의 과거 실적치와 거시·인구변수 등 활용) ○ 급여별 소득기준 차등화 적용 및 관련 정책(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반영, 향후 중위소득 기준 소득분포가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급여항목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급여) 대상자 수 또는 대상가구 수를 산출한 후, 급여유형(의료급여 1종, 2종 등)별 비중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대상가구는 가구원별 수급가구를 장래가구추계에 따라 전망 -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임차가구와 자가급여별 대상가구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의 소득 데이터와 기존 실적의 평균 수급률을 활용하여 전망 ○ 단가전망은 단가 증가추세 및 정부 정책, 관련 거시변수(임차료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를 고려하여 추정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수에 기초연금 수급대상 범위(70%)와 집행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 ○ 유형별 수급자 수는 전체 수급자 수에 전액 및 감액수급자 비중, 단독 및 부부 수급자 비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등을 적용하여 추정 ○ 각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평균 수급액을 적용하여 추계
영유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연령별 영유아 수에 정부지원 시설 및 미지원 시설 이용률을 적용하여 시설유형별 영유아 수를 추정 ○ 각 연령별, 시설유형별 수급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를 추정 ○ 수급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
장애수당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장애인 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중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추정 ○ 수급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급자 수는 18세 이상 인구 수에 1~3급 장애인 수 비중을 곱하여 추정 ○ 유형별 수급자 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단독 및 부부 수급자, 65세 이상 비중 등을 적용하여 추정 ○ 각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평균 수급액을 적용하여 추계

전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15.1조원에서 2030년 23.6조원으로 연평균 5.1%, 기초연금은 통계청 인구전망에서 65세 이상 노인 수가 2021년 854만명에서 2030년 1,29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1년 15.0조원에서 2030년 26.1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2021년 2.3조원에서 2022년에 수급자에 7세 아동이 추가됨에 따라 2.5조원으로 증가한 후 2028년까지 2.2조원으로 감소하다가 2030년에 2.4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표 27]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공공부조 의무지출	36.6	38.9	40.8	42.8	45.1	47.7	50.0	52.5	55.0	57.6	5.2
국민기초생활보장	15.1	16.1	17.0	17.8	18.7	19.6	20.4	21.4	22.5	23.6	5.1
기초연금	15.0	16.0	17.2	18.3	19.7	21.1	22.3	23.7	24.8	26.1	6.4
영유아보육	3.4	3.3	3.3	3.4	3.6	3.8	4.0	4.2	4.3	4.5	3.1
아동수당	2.3	2.5	2.3	2.2	2.2	2.2	2.2	2.2	2.3	2.4	0.4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3
장애인연금	0.8	0.9	0.9	0.9	0.9	0.9	0.9	1.0	1.0	1.0	1.7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공공부조 의무지출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기타 복지지출

복지 분야 기타의 의무지출은 보훈과 그밖의 의무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훈을 제외한 의무지출은 정부의 계획을 반영한다.

보훈분야의 의무지출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보철구지급,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 체대군인전직지원금 등 14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보상금(60개 대상으로 구분)과 수당(49개 대상으로 구분)은 각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¹⁸⁾ 추정된 단가를 곱하여 전망하였다. 이때, 보상금 및 수당 단가의 인상률은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과 연

18) 보상금별 대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의 모형 결과 인용하여 추정

동하지 않으며,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2022년에는 동결되었고, 이후년도 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과거 5년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재해보상금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2021.7.13.)으로 2022년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업무가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군인을 제외한 인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대상자는 ARIMA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지원단가는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기타 복지지출은 장애인활동지원, 해당금지급,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2025년 기간 동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금액을 반영하며, 2026년 이후는 경상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표 2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60개 대상으로 구분), 수당(49개 대상으로 구분), 보훈병원진료 등 14개 사업별로 구분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추정된 단가를 곱하여 전망 - 단가의 인상률은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지 않으며, 보상금/간호수당/6.25자녀수당은 2022년 5% 인상, 이후년도 부터는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만큼 인상 ○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과거 추세 적용 ○ 재해보상금은 2022년부터 군인 사망보상금 업무가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군인을 제외한 인원 적용 ○ 2021년부터 의무지출사업으로 편성된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자는 ARIMA 모형 적용, 단가는 동일하게 유지

전망 결과, 보훈분야 의무지출은 2021년 4.8조원에서 2030년 6.1조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유족(전몰·순직군경·상이군경 유족 등)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9]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기타 복지지출	7.6	8.1	8.4	8.7	9.0	9.3	9.5	9.8	10.1	10.4	3.5
보훈	4.8	4.9	5.0	5.2	5.3	5.4	5.6	5.7	5.9	6.1	2.6
기타	2.8	3.2	3.3	3.5	3.7	3.8	4.0	4.1	4.2	4.4	5.0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기타 복지지출 의무지출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나) 지방이전재원

의무지출 성격의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이 있으며, 내국세 등을 재원으로 하므로 내국세 등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¹⁹⁾로 한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으로 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전망도 2022년까지로 한다.

19) 이때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 참고

[표 3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교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의 경우 2021년 4월에 있었던 지방교부세 정산분 포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로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의 경우 2021년 4월에 있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포함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누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2021년과 2022년의 보육료 지원과 처우개선분의 합(34.3만원/1인) - 지원대상: 통계청의 3~5세 인구수 전망 × 2020년 어린이집 등록 비율(43.01%) - 지출전망: 지원금액(34.3만원/1인) × 지원대상 원아 수 ○ 유치원 누리과정(공립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2021년과 2022년의 학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금의 합(13만원/1인) - 지원대상: 통계청의 3~5세 인구수 전망 × 2020년 공립유치원 등록 비율(14%) - 지출전망: 지원금액(13만원/1인) × 지원대상 원아 수 ○ 유치원 누리과정(사립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2021년과 2022년의 학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금의 합(33만원/1인) - 지원대상: 통계청의 3~5세 인구수 전망 × 2020년 공립유치원 등록 비율(36%) - 지출전망: 지원금액(33만원/1인) × 지원대상 원아 수

전망 결과, 지방교부세는 2021년 57.6조원에서 2030년 87.8조원으로 연평균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9.6조원에서 2030년 89.2조원으로 연평균 4.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2021년 3.9조원, 2022년 3.5조원으로 예상된다.²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전망도 2022년까지로 한다.

20)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1년 전망치에는 2021년 4월에 있었던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분을 포함하였다.

[표 31]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123.4	136.6	133.3	139.3	145.6	152.5	158.0	164.3	170.7	177.0	4.1
지방교부세	57.6	64.1	65.7	68.7	72.0	75.5	78.3	81.5	84.7	87.8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6	64.9	67.7	70.6	73.6	77.0	79.7	82.8	86.0	89.2	4.6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9	3.5	-	-	-	-	-	-	-	-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지방이전재원 의무지출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다)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지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자지출, 기타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국고채 잔액에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국고채 잔액은 기발행 국고채와 신규발행 국고채로 구분하며, 신규발행 국고채는 관리재정수지 전망치의 일정비율로 추정한다. 동 비율은 2021~2025년 기간 동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비율과 동일하며, 2026년 이후는 2025년 수준인 95.1%로 가정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지출은 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발행금액²¹⁾과 5년 만기 시의 이율에 대한 전망 결과를 곱해서 계산하였다. 단,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이자지출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및 각 채권에 대한 이율에 따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액과 이율을 각각 전망한 후 각 전망값을 곱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이자지출 규모를 계산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의 기간 동안 매년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를 18조원으로 추계하였으며²²⁾, 재정전망에서는 2026년에도 2025년의 발행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2020년 10월에 발표된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에 따르면, 1종 채권에 대한 적용 이율은 1.0%였으

21) 국민주택채권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 채권(5년 만기)의 발행규모가 전체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의 99.9%를 차지

22) 참고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국민주택채권 발행규모를 15조원으로 추계하였음

며, 계속해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²³⁾. 코로나19 등에 따른 현재의 저금리 추세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동 기간에 대한 1종 채권의 적용 이율은 1.0%를 가정한 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 전망을 곱해서 주택도시기금 이자지출 규모를 전망하였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은 우체국예금 수신고와 조달금리를 각각 전망한 후 각 전망값을 곱해서 추계하였다. 우체국예금 수신고와 조달금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이 유지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수신고 및 조달금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타 이자지출은 청약저축 이자지급과 이를 제외한 그 외 이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외 이자지출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포함²⁴⁾된다. 기타 이자지출 전망은 청약저축 이자지급과 그 외 이자지출을 각각 전망한 후, 각 전망값을 더해서 추계하였다.

청약저축 이자지급은 청약저축 상환액과 이자율을 각각 전망한 후, 각 전망값을 곱해서 추계했다. 청약저축 상환액 전망은 청약저축 연말 잔액을 가수 수와의 비선형(로그함수)회귀모형을 이용해서 추계한 후, 2017년부터 2021년의 평균 상환율(19.8%)을 곱해서 산출했고, 이자율은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이자율(6.0%)이 2024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외 이자지출은 각 항목의 2021년 예산액이 매년 전망기간의 경상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항목의 지출규모를 전망한 후 그 합을 계산하였다.

23) 2021년 9월 23일 기준

24) 그 외 기타 이자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국고채 이자상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은차입금 이자상환,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연금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기타민간차입금 이자상환, 외교부의 재외공관 국유와 이자상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다.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자금 관리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국고채 잔액에 국고채 이자율을 곱하여 추계 ○ 국고채 잔액은 기발행 국고채와 신규발행 국고채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 시점 보유 국고채는 기발행 국고채로 분류 - 신규 발행 국고채는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전망치의 일정비율로 발행한다고 가정 ○ 국고채 이자율은 기발행 국고채와 신규발행 국고채로 구분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만기까지 적용 -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 적용
주택도시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채권 발행량 전망: 2022~2026년 연도별 발행량은 18조원 ○ 이율: 2026년까지는 현행 1.0% 수준을 유지 ○ 지출전망: 국민주택채권 발행량 × 이율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체국예금 수신고와 조달금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 수신고, 조달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우체국예금 수신고 전망 × 조달금리 전망

전망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은 2021년 14.3조원에서 2030년 32.9조원으로 연평균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의 지속적인 적자와 적자 규모 확대에 의해 이자지출 또한 증가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지출 규모가 결정되어 있는 2024년까지는 이자지출이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은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에 따른 우체국예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우체국예금의 수신고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전망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이자지출	17.9	19.1	21.2	23.0	25.1	27.3	29.4	31.7	34.0	36.4	8.2
공자기금 이자지출	14.3	15.9	17.7	19.7	21.8	23.9	26.0	28.2	30.5	32.9	9.7
주택도시기금 이자지출	1.1	1.2	1.4	1.1	1.0	0.9	0.9	0.9	0.9	0.9	-2.4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1.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기타	1.3	1.1	1.1	1.2	1.3	1.5	1.5	1.5	1.6	1.6	1.9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함

한편,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정책 대안에 따라 총지출 또는 총수입의 전망 결과가 달라지며 그로 인해 재정수지의 개선 정도가 달라진다. 이로 인해 의무지출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이 달라지는데, 시나리오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34]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현상유지	14.3	15.9	17.7	19.7	21.8	23.9	26.0	28.2	30.5	32.9	9.7
지출통제	14.3	15.9	17.7	19.7	21.8	23.8	25.6	27.3	28.8	30.2	8.6
세입확충	14.3	15.9	17.4	19.0	20.7	22.2	23.4	24.7	26.0	27.4	7.5
정책조합	17.9	19.1	20.9	22.3	24.0	25.4	26.4	27.1	27.8	28.2	5.2

주: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라)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의무지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대상인 고등학생 수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곱하여 전망했다. 이때 지원인원은 취학 적령 인구 수 대비 지원인원 비율 실적치를 통계

청의 「장애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취학 적령 인구 수에 곱하여 추정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2년 예산안에 따른 지원기준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했다.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은 2019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하여 도입되어 제도안착을 위한 단계로서 현행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1.7.7.)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말한다.

기타 의무지출 중 기타는 군사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등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2025년 기간 동안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금액을 반영하며, 2026년 이후는 NABO의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표 3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의무지출

전망 방법 및 가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가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증액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부터는 증액교부금 규정이 일몰됨 ○ 지원대상 고등학생 수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곱하여 추계
공익기능 증진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전망 결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2021년 0.9조원에서 2024년 1.0조원으로 예상된다. 2025년 이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은 발생하지만, 현행 증액교부금 조항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2024년까지만 전망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는 2021년 추경(2회)에 1.0조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2022년 예산안에 1.8조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련 계획

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중기재정전망에서도 이를 따른다.

[표 36]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기타 의무지출	8.7	10.2	8.1	8.3	7.3	7.5	7.7	7.9	8.1	8.3	-0.4
고등학교 무상교육	0.9	0.9	0.9	1.0	-	-	-	-	-	-	
공익기능증진직불금	2.4	2.4	2.5	2.5	2.6	2.6	2.6	2.7	2.7	2.8	1.5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1.0	1.8	-	-	-	-	-	-	-	-	
기타	4.3	5.0	4.7	4.8	4.7	4.9	5.0	5.2	5.4	5.6	3.0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기타 의무지출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2)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재량지출 전망 결과는 동일하며 2021년 325.8조원에서 2030년 411.3조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재량지출은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수준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므로 2021년 325.8조원에서 2030년 348.4조원으로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7]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현상유지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지출통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세입확충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3.4)	(3.4)	(3.4)	(3.4)	(3.3)	
정책조합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전년 대비 증가율)		(-6.9)	(6.5)	(4.1)	(3.6)	(0.0)	(0.0)	(0.0)	(0.0)	(0.0)	

다. 재정수지

시나리오별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결과에 따라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83.5조원 적자에서 2030년 112.6조원 적자로 전망되며, 통합재정수지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1년 $\Delta 4.1\%$ 에서 2030년 $\Delta 4.0\%$ 로 전망된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수준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83.5조원 적자에서 2030년 46.9조원(GDP 대비 비율 $\Delta 1.7\%$)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83.5조원 적자에서 2030년 51.3조원(GDP 대비 비율 $\Delta 1.8\%$)으로 전망되며,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의 정책을 조합하는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83.5조원 적자에서 2030년 14.4조원(GDP 대비 비율 0.5%)으로 전망된다.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재정수지 개선분이 커 202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38]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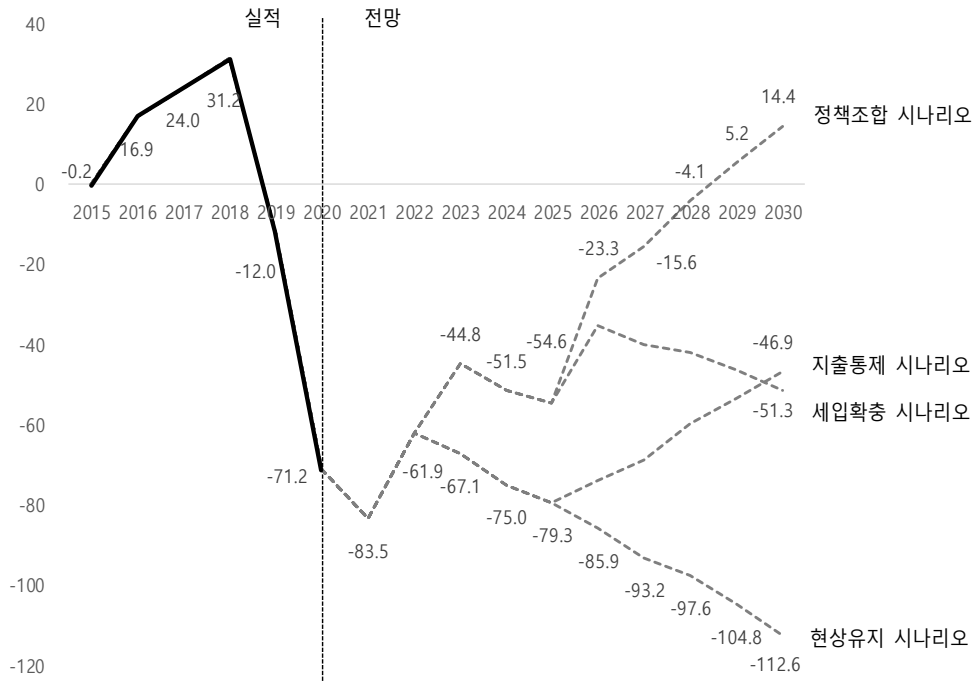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상유지 (GDP 대비 비율)	-83.5 (-4.1)	-61.9 (-2.9)	-67.1 (-3.0)	-75.0 (-3.3)	-79.3 (-3.4)	-85.9 (-3.5)	-93.2 (-3.7)	-97.6 (-3.7)	-104.8 (-3.9)	-112.6 (-4.0)
지출통제 (GDP 대비 비율)	-83.5 (-4.1)	-61.9 (-2.9)	-67.1 (-3.0)	-75.0 (-3.3)	-79.3 (-3.4)	-73.9 (-3.0)	-68.7 (-2.7)	-59.9 (-2.3)	-53.2 (-2.0)	-46.9 (-1.7)
세입확충 (GDP 대비 비율)	-83.5 (-4.1)	-61.9 (-2.9)	-44.8 (-2.0)	-51.5 (-2.3)	-54.6 (-2.3)	-35.3 (-1.4)	-40.1 (-1.6)	-41.8 (-1.6)	-46.3 (-1.7)	-51.3 (-1.8)
정책조합 (GDP 대비 비율)	-83.5 (-4.1)	-61.9 (-2.9)	-44.8 (-2.0)	-51.5 (-2.3)	-54.6 (-2.3)	-23.3 (-1.0)	-15.6 (-0.6)	-4.1 (-0.2)	5.2 (0.2)	14.4 (0.5)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그림 5]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통합재정수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참고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지와 적립금에 대한 전망 결과도 제시한다.

[표 39]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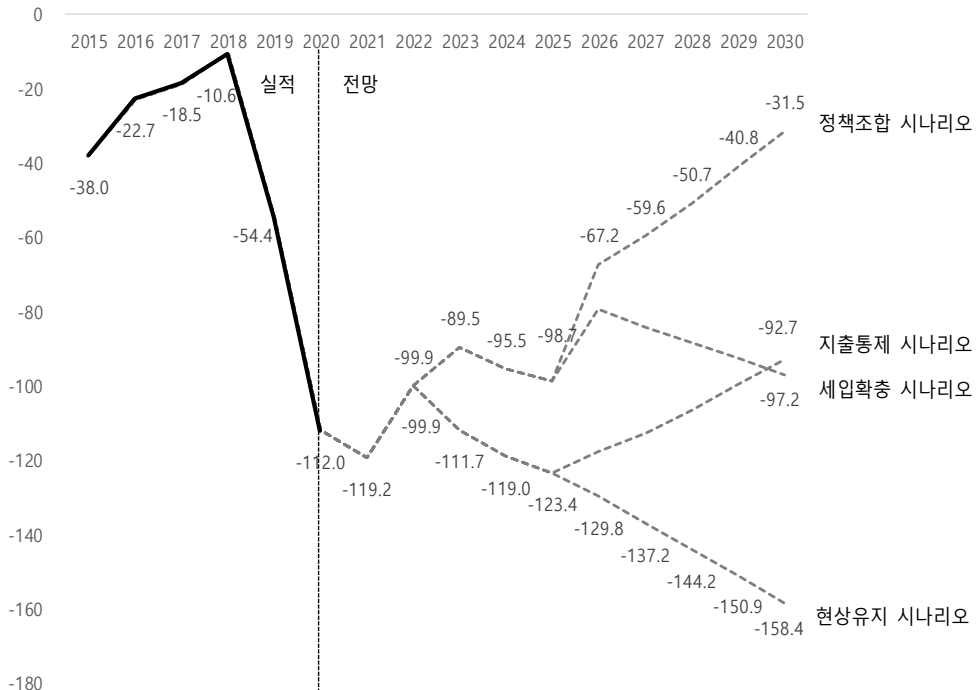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상유지	-119.2	-99.9	-111.7	-119.0	-123.4	-129.8	-137.2	-144.2	-150.9	-158.4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5.3)	(-5.4)	(-5.5)	(-5.6)	(-5.7)
지출통제	-119.2	-99.9	-111.7	-119.0	-123.4	-117.8	-112.7	-106.5	-99.3	-92.7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4.8)	(-4.5)	(-4.1)	(-3.7)	(-3.3)
세입확충	-119.2	-99.9	-89.5	-95.5	-98.7	-79.2	-84.1	-88.4	-92.4	-97.2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3.2)	(-3.3)	(-3.4)	(-3.4)	(-3.5)
정책조합	-119.2	-99.9	-89.5	-95.5	-98.7	-67.2	-59.6	-50.7	-40.8	-31.5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2.8)	(-2.4)	(-1.9)	(-1.5)	(-1.1)

주: 1. 2021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이므로 2021년 추경(2회)과 다름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그림 6]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참고] 8대 사회보험의 수지 및 적립금 전망

□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21년 41.5조원 흑자에서 2030년 41.0조원 흑자로 전망기간 동안 흑자 지속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72.4	75.4	78.4	81.3	84.7	88.1	91.5	95.2	98.9	102.9	4.0
지출	30.9	34.7	35.5	39.5	43.3	47.3	51.3	52.5	57.2	61.9	8.0
수지	41.5	40.7	42.8	41.8	41.3	40.8	40.2	42.7	41.6	41.0	
적립금 (GDP 대비)	875.2 (42.9)	915.9 (43.1)	958.7 (43.5)	1,000.5 (43.8)	1,041.8 (44.1)	1,082.6 (44.4)	1,122.9 (44.5)	1,165.5 (44.7)	1,207.2 (44.7)	1,248.2 (44.8)	4.0

- 주: 1. 수입, 지출, 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함
2.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 사학연금

- 사학연금기금수지는 2021년 0.1조원 흑자에서 2030년 0.9조원 적자로 2022년부터 적자 전환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5.8	5.9	6.1	6.1	6.2	6.3	6.5	6.7	6.9	7.1	2.2
지출	5.7	6.1	6.3	6.5	6.8	7.0	7.3	7.6	7.8	8.1	3.9
수지	0.1	-0.1	-0.1	-0.3	-0.5	-0.6	-0.7	-0.8	-0.9	-0.9	
적립금	24.4	25.4	26.3	27.1	27.6	28.0	28.4	28.7	28.9	29.1	2.0

- 주: 수입, 지출, 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함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금수지는 2021년 6.1조원 적자에서 2030년 4.5조원 흑자로 202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흑자 전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0.2%p 인상 계획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14.6	16.4	18.1	19.0	20.1	21.2	22.3	23.5	24.7	25.8	6.5
지출	20.7	19.2	17.2	17.5	17.9	18.5	19.0	20.0	20.6	21.3	0.3
수지	-6.1	-2.8	0.9	1.5	2.2	2.7	3.3	3.5	4.1	4.5	
적립금	4.7	4.3	5.3	6.8	9.0	11.6	14.9	18.4	22.5	21.6	18.3

주: 수입, 지출, 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함

□ 산재보험

- 산재보험기금수지는 2021년 0.2조원 흑자에서 2030년 1.3조원 흑자로 전망기간 동안 흑자 지속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8.6	9.3	10.4	10.8	11.2	11.6	12.1	12.6	13.2	13.7	5.3
지출	8.4	9.0	9.4	9.7	10.1	10.5	11.0	11.4	11.9	12.4	4.4
수지	0.2	0.3	1.0	1.0	1.1	1.1	1.2	1.2	1.3	1.3	
적립금	21.0	21.3	22.4	23.6	24.8	26.0	27.2	28.4	29.7	31.0	4.4

주: 수입, 지출, 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함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기금수지는 2021년 4.3조원 적자에서 2030년 9.6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지속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16.9	19.2	20.2	21.1	22.2	22.4	23.2	23.8	24.4	25.0	4.4
지출	21.2	22.4	24.3	26.0	27.4	28.7	30.2	31.8	33.0	34.6	5.6
수지	-4.3	-3.2	-4.1	-4.9	-5.2	-6.3	-7.0	-8.0	-8.6	-9.6	
적립금	13.7	14.1	14.6	15.1	15.5	15.9	16.4	16.9	17.3	17.8	3.0

- 주: 1. 수입, 지출, 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함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재정운영방식은 부과방식이고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금을 보유 중이며, 국민연금의 적립금과 기능, 역할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군인연금

- 군인연금기금수지는 2021년 2.8조원 적자에서 2030년 4.1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지속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0.7	0.8	0.8	0.8	0.8	0.8	0.8	0.9	0.9	0.9	2.2
지출	3.6	3.6	3.8	3.9	4.0	4.2	4.3	4.5	4.6	5.0	3.8
수지	-2.8	-2.9	-3.0	-3.1	-3.2	-3.3	-3.5	-3.6	-3.7	-4.1	
적립금	1.3	1.4	1.4	1.4	1.5	1.5	1.5	1.6	1.6	1.6	2.3

- 주: 1. 수입, 지출, 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함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재정운영방식은 부과방식이고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금을 보유 중이며, 국민연금의 적립금과 기능, 역할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 건강보험수지는 건강보험요율 상한(8%) 도달(2027년)에 따른 수입 증가분 축소,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지출 증가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202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

중기재정전망: 건강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80.9	86.3	93.3	102.1	111.4	121.4	129.2	136.0	143.2	150.6	7.2
지출	81.7	90.7	97.5	106.9	118.5	126.6	134.4	144.5	155.1	164.1	8.1
수지	-0.8	-4.4	-4.2	-4.8	-7.2	-5.2	-5.2	-8.4	-11.9	-13.5	
적립금	16.6	12.2	8.0	3.2	-4.0	-	-	-	-	-	

주: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의 일시적인 감소 추세가 중장기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9.5.)에 따른 급여비 절감대책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는 건강보험요율 상한(8%) 도달(2027년)에 따른 수입(건강보험료 수입에 연동) 증가분 축소,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지출 증가로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

중기재정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수입	11.5	13.2	14.2	15.5	16.9	18.4	19.6	20.7	21.9	23.1	8.0
지출	10.9	12.5	14.1	15.5	17.2	18.7	20.8	22.6	24.3	26.4	10.3
수지	0.6	0.7	1.9	-0.0	-0.3	-0.3	-1.2	-1.9	-2.4	-3.3	
적립금	1.4	2.1	2.3	2.3	2.0	1.7	0.5	-1.4	-	-	

라.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구분할 수 있고,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상환, 지방정부 순채무가 대표적이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의미하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해당된다.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국가채무는 2021년 965.9조원(GDP 대비 47.3%)에서 2030년 2,198.8조원(GDP 대비 78.9%)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지출통제 또는 세입확충에 따른 시나리오의 국가채무 수준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감소하며,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72.3%, 세입확충 시나리오는 67.1%,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60.6%로 각각 전망된다.

[표 40]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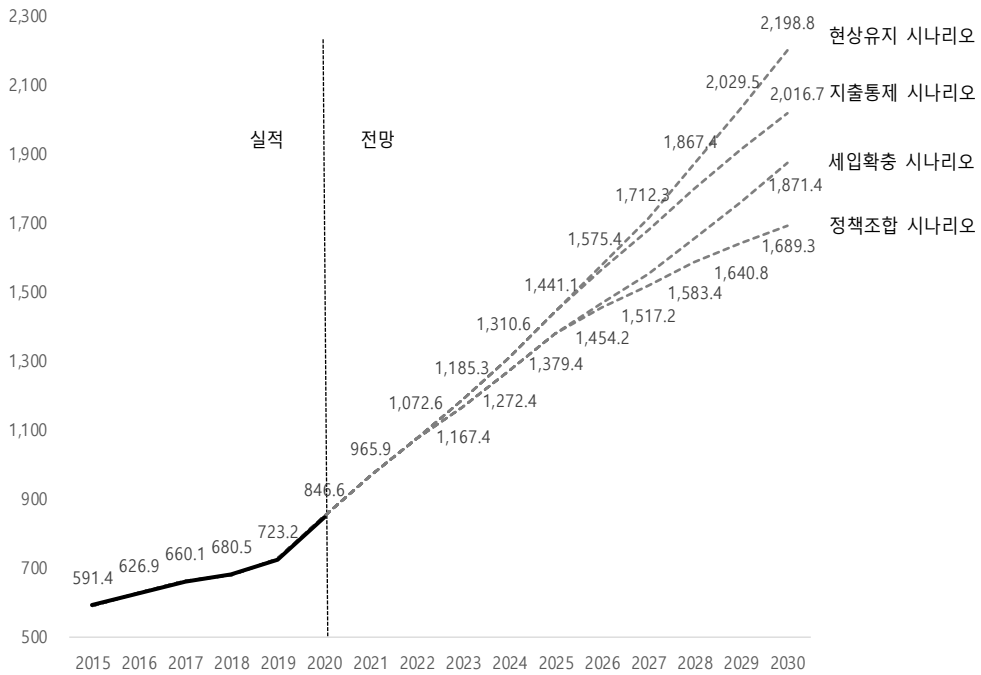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상유지 (GDP 대비 비율)	965.9 (47.3)	1,072.6 (50.4)	1,185.3 (53.7)	1,310.6 (57.4)	1,441.1 (61.0)	1,575.4 (64.5)	1,712.3 (67.8)	1,867.4 (71.6)	2,029.5 (75.2)	2,198.8 (78.9)
지출통제 (GDP 대비 비율)	965.9 (47.3)	1,072.6 (50.4)	1,185.3 (53.7)	1,310.6 (57.4)	1,441.1 (61.0)	1,564.0 (64.1)	1,677.6 (66.5)	1,796.8 (68.9)	1,909.9 (70.8)	2,016.7 (72.3)
세입확충 (GDP 대비 비율)	965.9 (47.3)	1,072.6 (50.4)	1,167.4 (52.9)	1,272.4 (55.7)	1,379.4 (58.4)	1,465.6 (60.0)	1,551.9 (61.5)	1,654.0 (63.4)	1,760.4 (65.2)	1,871.4 (67.1)
정책조합 (GDP 대비 비율)	965.9 (47.3)	1,072.6 (50.4)	1,167.4 (52.9)	1,272.4 (55.7)	1,379.4 (58.4)	1,454.2 (59.6)	1,517.2 (60.1)	1,583.4 (60.7)	1,640.8 (60.8)	1,689.3 (60.6)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그림 7]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주: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20.9.) 중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2030년 국가채무는 2,229조원임

(1) 중앙정부 채무

중앙정부의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신규 국고채 발행 규모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일정 비율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2021년의 경우 정부의 일반회계 적자보전 신규 국고채 발행 규모를 반영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해당 비율을 적용하며, 2026년 이후는 2025년 수준(95.1%)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중앙정부 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2021년 581.8조원(GDP 대비 28.5%)에서 1,620.8조원(GDP 대비 58.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41]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일반회계 적자보전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일반회계 적자보전	○ 2021년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금액 반영
	○ 2022~2025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산출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적자성 국채 증가분의 비율(적자성 국채 증가분/관리재정수지 적자) 적용 - 2022년 81.9%, 2023년 80.4%, 2024년 86.3%, 2025년 95.1%
	○ 2026~2030년 - 2025년 수준(95.1%) 적용

[표 42]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 중앙정부 채무(적자성 채무)

(단위: 조원, %)

시나리오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상유지 (GDP 대비 비율)	581.8 (28.5)	659.2 (31.0)	743.3 (33.7)	840.2 (36.8)	951.5 (40.3)	1,069.2 (43.8)	1,188.9 (47.1)	1,326.3 (50.8)	1,469.9 (54.5)	1,620.8 (58.1)
지출통제 (GDP 대비 비율)	581.8 (28.5)	659.2 (31.0)	743.3 (33.7)	840.2 (36.8)	951.5 (40.3)	1,057.9 (43.3)	1,154.2 (45.7)	1,255.7 (48.1)	1,350.3 (50.0)	1,438.7 (51.6)
세입확충 (GDP 대비 비율)	581.8 (28.5)	659.2 (31.0)	725.4 (32.9)	802.0 (35.1)	889.8 (37.7)	959.4 (39.3)	1,028.5 (40.8)	1,112.8 (42.6)	1,200.9 (44.5)	1,293.4 (46.4)
정책조합 (GDP 대비 비율)	581.8 (28.5)	659.2 (31.0)	725.4 (32.9)	802.0 (35.1)	889.8 (37.7)	948.0 (38.8)	993.9 (39.4)	1,042.3 (39.9)	1,081.2 (40.1)	1,111.3 (39.9)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금융성 채무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며, 2026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²⁵⁾ 전망 결과, 금융성 채무는 2021년 356.0조원(GDP 대비 17.4%)에서 537.5조원(GDP 대비 19.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5) 금융성채무의 경우 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5.7% 수준이다.

[표 43] 중기재정전망: 중앙정부 채무(금융성 채무)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금융성 채무	356.0	382.3	409.2	436.9	455.3	470.7	486.7	503.2	520.3	537.5
(GDP 대비 비율)	(17.4)	(18.0)	(18.6)	(19.1)	(19.3)	(19.3)	(19.3)	(19.3)	(19.3)	(19.3)

주: 1.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2. 금융성 채무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2) 지방정부 순채무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잔액을 차감한 것인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금액을 반영한다. 2026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1년 28.1조원에서 2030년 40.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44] 중기재정전망: 지방정부 순채무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지방정부 순채무	28.1	31.1	32.7	33.5	34.3	35.5	36.7	37.9	39.2	40.5
(GDP 대비 비율)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주: 1.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2.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Ⅲ.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정책 변화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예산안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기준전망은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시점(2021.9.3.)의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전망치이다.

기준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기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먼저 국세수입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있다. 한편,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 8월 발표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세수변화²⁶⁾를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하였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하기로 한 정책 변화(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 2021.9.1.)를 반영하였다.²⁷⁾

26) 정부는 2021년 8월 현재 2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2021.8.11.)하였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2021.9.13.)하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12230, 김영진의원안) 등을 논의 중이다.

27) 다만,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2023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확정된 이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표 45]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세법개정안」 등에 따른 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고용중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및 일몰연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현행 21% → 2022년 23.7% → 2023년 25.3%) ○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세감면 제도는 향후 일몰도래시 일몰기한이 연장됨을 가정 - 2021년 일몰도래하는 대표적인 조세특례 항목: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국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021.9.1.)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1.6% → 1.8% - (예술인, 노무제공자) 1.4% → 1.6%

총지출에서의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의무지출의 경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인상이 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국가지원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의무지출인 국가지원금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확대된다.²⁸⁾

재량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며, 기준전망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므로 두 계획 간의 금액 차이를 정책 변화로 가정한다.

28) 의무지출 항목별로 단가 인상이나 국고보조율 조정 등의 정책 변화는 해당 항목에서 상세히 언급한다.

[표 46]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주요 정책 변화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대로 수입에 연동되는 가입자지원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보험료율 6.99%로 인상(2021년 6.86%)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대로 수입에 연동되는 가입자지원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보험료율 12.27%로 인상(2021년 11.52%)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중 2022년에 시행되는 정책 반영(중수급자 방문요양 월 한도액 증액,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현행 50% → 80%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 ○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적용 제외(2022.1.1.) ○ (주거급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대상 ○ (아동수당) 지원범위 확대(20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 확대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 금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전망의 경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 금액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조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h>2025</th> </tr> </thead> <tbody> <tr> <td>2021년 계획</td> <td>-</td> <td>325.8</td> <td>303.3</td> <td>323.0</td> <td>336.2</td> <td>348.4</td> </tr> <tr> <td>2020년 계획</td> <td>291.8</td> <td>288.5</td> <td>306.6</td> <td>320.0</td> <td>326.1</td> <td>-</td> </tr> </tbody> </table> <p>주: 2021년 계획의 2021년은 추경(2회) 기준, 2020년 계획의 2020년은 추경(3회) 기준</p>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년 계획	-	325.8	303.3	323.0	336.2	348.4	2020년 계획	291.8	288.5	306.6	320.0	326.1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년 계획	-	325.8	303.3	323.0	336.2	348.4																
2020년 계획	291.8	288.5	306.6	320.0	326.1	-																

2.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재정 영향

가. 총수입

(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고용보험료 인상폭 및 시기 조정 등의 영향으로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총수입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 5.1~△7.7조원 낮으며, 10년 동안 61.9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를 보면,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267.8조원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항목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차이에 대한 설명은 조세부담률을 인상하지 않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다.

[표 47]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지출통제	526.4	552.1	569.6	593.5	619.0	644.3	667.4	692.7	718.5	744.5	3.9
세입확충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정책조합	526.4	552.1	591.7	616.4	642.7	693.1	717.8	744.9	772.4	800.3	4.8
기준전망(B)	526.4	557.2	576.2	600.9	626.5	650.8	674.1	699.8	725.9	752.2	4.0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5.1	-6.5	-7.4	-7.4	-6.5	-6.8	-7.1	-7.4	-7.7	-61.9
지출통제	0.0	-5.1	-6.5	-7.4	-7.4	-6.5	-6.8	-7.1	-7.4	-7.7	-61.9
세입확충	0.0	-5.1	15.5	15.4	16.2	42.3	43.7	45.1	46.6	48.0	267.8
정책조합	0.0	-5.1	15.5	15.4	16.2	42.3	43.7	45.1	46.6	48.0	267.8

(2) 항목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차이

(가) 국세수입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은 현 조세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3.9~△6.2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10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보다 49.3조원 낮다.

[표 4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단위: 조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세수입	0.0	-3.9	-5.7	-6.0	-6.2	-5.1	-5.3	-5.5	-5.7	-5.9	-49.3
소득세	0.0	-0.6	-0.3	-0.3	-0.3	-0.3	-0.3	-0.3	-0.3	-0.3	-2.8
법인세	0.0	-0.6	-1.2	-1.3	-1.3	0.0	0.0	0.0	0.0	0.0	-4.3
부가가치세	0.0	-2.8	-4.4	-4.5	-4.7	-4.9	-5.1	-5.2	-5.4	-5.6	-42.7
기타	0.0	0.1	0.1	0.1	0.1	0.0	0.0	0.0	0.0	0.0	0.4

주: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3~△0.6 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10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보다 2.8조원 낮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의 세수효과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표 4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구분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홀벌이·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1천만원 이하/초과 : 15%/30% → 20%/35%)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형창업의 연 수입금액 기준 완화: 4,800만원→8,000만원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공제한도 신설

법인세는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0~△1.3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10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보다 4.3조원 낮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지원 확대와 고용증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준전망 대비 중기재정전망은 2022년 △0.6조원 세수차이가 발생하며 2025년에는 △1.3조원까지 확대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지원 강화의 세수효과가 사라지는 2026년 이후에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표 5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대비 +10%p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대비 +3~4%p - 적용기간: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지출·투자한 비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2년간 비수도권 법인의 청년 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적 상향

부가가치세는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2.8~△5.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10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보다 42.7조원 낮다. 이는 주로 지방소비세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감소에 기인한다.²⁹⁾ 중기재정전망의 부가가치세는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의 인상 및 그 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영함에 따라 기준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로 인상됨에 따라,³⁰⁾ 국세인 부가가치세수는 2022년 2.7조원, 2023년 4.4조원 등 2022~2030년간 총 42.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29) 부가가치세 기준전망은 2021~2030년 동안 연평균 4.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전망은 같은 기간 0.65%p 낮은 연평균 3.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 정부는 2021년 8월 현재 2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2022년 23.7%(전년대비 +2.7%p), 2023년 25.3%(전년대비 +1.6%p)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임을 발표(2021.8.11.)하였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2021.9.13.)하였으며, 기재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12230, 김영진의원안) 등을 논의 중이다.

면세 신설, 농협·수협이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등의 세수효과가 추가 반영되었다.

[표 51] 주요 정책 변화: 부가가치세

주요 정책 변화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1% → 2022년 23.7% → 2023년 이후 25.3% ○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 농협·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기타 세목은 장기적으로 자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소비량 증가 둔화 전망 등을 감안시 증가세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전망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는 연간 0.0~0.1조원, 10년(2021~2030년)간 총 0.4조원 수준으로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³¹⁾ 기준전망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는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법인세 지원 강화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증가효과³²⁾가 있다.

그 외 기준전망 및 재정전망에는 과거 세법개정을 통해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였거나 적용이 예정된 정책 변화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1년 시장별로 세율을 0.02%p 인하한 데 이어 2023년 0.08%p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2018년 세법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p씩 상승하여 2022년 이후 100%로 적용될 예정이다.

31) 기타 세목 기준전망은 2021~2030년 동안 연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전망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함에 따라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이 증가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증가한다.

[표 52]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법인세 감면)로 인한 농어촌 특별세 증가
	<p>(기반영된 정책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 (2019년) 0.1, (2021년) 0.08, (2023년) 0 - 코스닥(%): (2019년) 0.25, (2021년) 0.23, (2023년) 0.15 - 비상장·장외(%): (2019년) 0.45, (2021년) 0.43, (2023년) 0.35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95% → (2022년 이후) 100%

(나) 국세외수입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외수입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1.8~0.0조원 낮으며, 향후 10년 간 12.6조원 낮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보장기여금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인상폭 및 시기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³³⁾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는 주요 정책 변화가 없으므로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결과는 동일하다.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세외수입	0.0	-1.2	-0.8	-1.4	-1.3	-1.4	-1.5	-1.6	-1.7	-1.8	-12.6
사회보장기여금	0.0	-0.7	-0.8	-1.6	-1.7	-1.8	-1.9	-2.0	-2.1	-2.1	-14.6
연금기여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4	-0.1	0.2	0.4	0.4	0.4	0.4	0.4	0.3	2.0

주: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중기재정전망의 고용보험기여금은 정부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인상 계획을

33) 「2022년도 산재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되었으므로 기준전망과 재정전망에 모두 반영하였다. 따라서 산재보험기여금에 대한 중기재정전망 결과는 기준전망과 동일하다.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기준전망 대비로는 감소하는데, 기준전망에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으므로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하여 기준전망의 고용보험기여금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³⁴⁾ 2020년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에 2021년 대비 0.2%p, 2023년에 2022년 대비 0.1%p, 2024년에 2023년 대비 0.1%p 인상할 계획이었다.

[표 54]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장기여금

구분	주요 정책 변화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021.9.1.)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보다 0.2%p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1.6% → 1.8% - (예술인, 노무제공자) 1.4% → 1.6%

나. 총지출

(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총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1.6~20.0조원의 차이가 나며, 향후 10년 간 113.8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를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달리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77.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확충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재량지출에 대한 가정이 현상유지 시나리오 및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동일함에도 총지출 수준이 다른 이유는 재정수지 개선에 따른 이자지출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하 항목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차이에 대한 설명은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다.

34)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자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에 1.3%에서 1.6%로 인상되었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각각 2020년 12월 10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술인의 보험료율은 시행 당시에는 1.6%이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1.4%로 인하되었으며,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은 1.4%이다.

[표 55]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609.9	614.0	636.7	668.5	698.4	730.2	760.6	790.3	823.3	857.1	3.9
지출통제	609.9	614.0	636.7	668.5	698.4	718.2	736.1	752.6	771.7	791.4	2.9
세입확충	609.9	614.0	636.5	667.9	697.2	728.4	757.9	786.7	818.8	851.6	3.8
정책조합	609.9	614.0	636.5	667.9	697.2	716.4	733.4	749.0	767.2	785.9	2.9
기준전망(B)	609.9	615.6	633.7	657.3	685.0	714.6	744.2	773.1	804.7	837.2	3.6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1.6	3.0	11.3	13.3	15.6	16.4	17.2	18.6	20.0	113.8
지출통제	0.0	-1.6	3.0	11.3	13.3	3.6	-8.1	-20.5	-33.0	-45.7	-77.6
세입확충	0.0	-1.6	2.8	10.6	12.2	13.8	13.7	13.7	14.1	14.5	93.8
정책조합	0.0	-1.6	2.8	10.6	12.2	1.8	-10.8	-24.0	-37.5	-51.2	-97.6

(2) 항목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 차이

(가) 의무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은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0.0~6.8조원 높으며, 향후 10년 동안 30.9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이 달라지는 이유는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였기 때문인데, 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정책 변화가 없으므로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결과가 동일하다.

[표 56]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주요 의무지출

(단위: 조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의무지출	0.0	1.7	0.1	1.1	2.2	4.0	4.4	4.9	5.8	6.8	30.9
건강보험	0.0	0.3	0.7	1.1	1.7	2.2	2.5	2.6	2.8	2.9	16.8
노인장기요양보험	0.0	0.3	0.4	0.5	0.6	0.7	0.8	0.8	0.8	0.9	5.7
고용보험	0.0	0.2	0.3	0.3	0.2	0.2	0.2	0.2	0.2	0.2	2.1
국민기초생활보장	0.0	0.1	0.4	0.5	0.7	0.9	1.1	1.3	1.5	1.8	8.4
아동수당	0.0	0.3	0.3	0.3	0.3	0.2	0.2	0.2	0.2	0.2	2.4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현상유지)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의무지출 항목임

사회보험 분야의 의무지출 사업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16.8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17.8.)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5.)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2023년 이후 매년 3.2%씩 인상)³⁵⁾을 반영하였으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5.7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전망의 경우 기 결정된 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와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유지되고 국고지원 비율을 최근 3년(2018~2020년)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나,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월한도액 증액,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인상하고(2022년 이후 12.27%)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다.

고용보험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0.2~0.3조원, 10년 동안 2.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증가 원인은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80%,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50%이나,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80%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 반면, 구직급여의 경

35) 2021년과 2022년도는 기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률(2021년 2.89%, 2022년 1.89%)을 적용한다.

우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이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는데,³⁶⁾ 고용노동부에 따른 동 방안에 따라 2025년부터 연 752억원의 지출 감소가 예상된다.

[표 57]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의무지출

주요 정책 변화	
건강보험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3%(일반회계 11.8%, 건강증진기금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2022년 보험료율 12.27%), 2023년 이후 유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동일 가정 ○ 2021년 이후 법정 정부지원금 비중 20% 적용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중 2022년에 시행되는 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 강화 정책(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월 한도액 증액,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소요 확대 ○ 수가 인상률은 2022년 기결정된 4.32%, 2023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명목임금인상률 적용
고용보험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현행 50% → 80%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 감액(「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3회 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은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의 확대, 급여액 증액 등에 따라 기준전망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는 기준전망 대비 0.1~1.8조원, 10년 동안 8.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기준전망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는 기준전망 대비 0.0~0.3조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3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021.9.1. 동 방안 중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08호, 2021.7.23.) 참고

10년 동안 2.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표 58]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구 분	주요 정책 변화
국민기초 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단가 및 국고보조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른 급여액 증액 - 생계급여 국고보조율 [(2021년) 82.31% → (2022년) 83.13%] 인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적용 제외(2022.1.1.) ○ 해산장제급여 국고보조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율 [(2021년) 82.31% → (2022년) 83.13%] 인상 ○ 주거급여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대상 ○ 교육급여 단가 및 국고보조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초) 286→331천원, (중) 376→466천원, (고) 448→554천원] 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82.31% → 83.13%) 인상 <p>(기반영된 정책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만 30세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既 폐지 - 2022년 10월 그 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49,280 가구 신규 추가)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지원범위 확대(20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 확대 - 국고보조율 [(2021년) 75.1% → (2022년) 73.6%] 인하

(나) 재량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은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82.9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준전망에서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정책조합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에 따르면, 지출통제에 따라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102.6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59]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지출통제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세입확충	325.8	303.3	323.0	336.2	348.4	360.2	372.4	385.1	398.2	411.3	2.6
정책조합	325.8	303.3	323.0	336.2	348.4	348.4	348.4	348.4	348.4	348.4	0.7
기준전망(B)	325.8	306.6	320.0	326.1	337.2	348.6	360.5	372.7	385.4	398.1	2.3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3.3	3.0	10.1	11.2	11.6	12.0	12.4	12.8	13.2	82.9
지출통제	0.0	-3.3	3.0	10.1	11.2	-0.3	-12.1	-24.4	-37.1	-49.8	-102.6
세입확충	0.0	-3.3	3.0	10.1	11.2	11.6	12.0	12.4	12.8	13.2	82.9
정책조합	0.0	-3.3	3.0	10.1	11.2	-0.3	-12.1	-24.4	-37.1	-49.8	-102.6

다.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통합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2030년 기준으로 경상GDP 대비 1%p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통제 또는 세입확충의 정책 대안을 반영한 시나리오의 경우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비해 기준전망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2030년 기준 1.2~3.6%p 개선).

[표 60]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83.5	-61.9	-67.1	-75.0	-79.3	-85.9	-93.2	-97.6	-104.8	-112.6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5)	(-3.7)	(-3.7)	(-3.9)	(-4.0)	
지출통제	-83.5	-61.9	-67.1	-75.0	-79.3	-73.9	-68.7	-59.9	-53.2	-46.9	
(GDP 대비 비율)	(-4.1)	(-2.9)	(-3.0)	(-3.3)	(-3.4)	(-3.0)	(-2.7)	(-2.3)	(-2.0)	(-1.7)	
세입확충	-83.5	-61.9	-44.8	-51.5	-54.6	-35.3	-40.1	-41.8	-46.3	-51.3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4)	(-1.6)	(-1.6)	(-1.7)	(-1.8)	
정책조합	-83.5	-61.9	-44.8	-51.5	-54.6	-23.3	-15.6	-4.1	5.2	14.4	
(GDP 대비 비율)	(-4.1)	(-2.9)	(-2.0)	(-2.3)	(-2.3)	(-1.0)	(-0.6)	(-0.2)	(0.2)	(0.5)	
기준전망(B)	-83.5	-58.4	-57.5	-56.3	-58.5	-63.8	-70.1	-73.3	-78.8	-84.9	
(GDP 대비 비율)	(-4.1)	(-2.7)	(-2.6)	(-2.5)	(-2.5)	(-2.6)	(-2.8)	(-2.8)	(-2.9)	(-3.0)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3.5	-9.6	-18.7	-20.8	-22.1	-23.2	-24.3	-26.0	-27.7	-175.7
(GDP 대비 비율)	(0.0)	(-0.2)	(-0.4)	(-0.8)	(-0.9)	(-0.9)	(-0.9)	(-0.9)	(-1.0)	(-1.0)	
지출통제	0.0	-3.5	-9.6	-18.7	-20.8	-10.1	1.3	13.4	25.6	38.0	15.7
(GDP 대비 비율)	(0.0)	(-0.2)	(-0.4)	(-0.8)	(-0.9)	(-0.4)	(0.1)	(0.5)	(0.9)	(1.4)	
세입확충	0.0	-3.5	12.7	4.8	3.9	28.5	30.0	31.4	32.5	33.6	174.0
(GDP 대비 비율)	(0.0)	(-0.2)	(0.6)	(0.2)	(0.2)	(1.2)	(1.2)	(1.2)	(1.2)	(1.2)	
정책조합	0.0	-3.5	12.7	4.8	3.9	40.5	54.5	69.1	84.1	99.3	365.4
(GDP 대비 비율)	(0.0)	(-0.2)	(0.6)	(0.2)	(0.2)	(1.7)	(2.2)	(2.6)	(3.1)	(3.6)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시나리오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통합재정수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표 61]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119.2	-99.9	-111.7	-119.0	-123.4	-129.8	-137.2	-144.2	-150.9	-158.4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5.3)	(-5.4)	(-5.5)	(-5.6)	(-5.7)	
지출통제	-119.2	-99.9	-111.7	-119.0	-123.4	-117.8	-112.7	-106.5	-99.3	-92.7	
(GDP 대비 비율)	(-5.8)	(-4.7)	(-5.1)	(-5.2)	(-5.2)	(-4.8)	(-4.5)	(-4.1)	(-3.7)	(-3.3)	
세입확충	-119.2	-99.9	-89.5	-95.5	-98.7	-79.2	-84.1	-88.4	-92.4	-97.2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3.2)	(-3.3)	(-3.4)	(-3.4)	(-3.5)	
정책조합	-119.2	-99.9	-89.5	-95.5	-98.7	-67.2	-59.6	-50.7	-40.8	-31.5	
(GDP 대비 비율)	(-5.8)	(-4.7)	(-4.1)	(-4.2)	(-4.2)	(-2.8)	(-2.4)	(-1.9)	(-1.5)	(-1.1)	
기준전망(B)											
	-119.2	-99.1	-103.2	-102.4	-104.7	-109.9	-116.4	-122.4	-127.6	-133.6	
(GDP 대비 비율)	(-5.8)	(-4.7)	(-4.7)	(-4.5)	(-4.4)	(-4.5)	(-4.6)	(-4.7)	(-4.7)	(-4.8)	
차 이(A-B)											합계
현상유지	0.0	-0.9	-8.5	-16.6	-18.7	-19.8	-20.8	-21.8	-23.3	-24.8	-155.1
(GDP 대비 비율)	(0.0)	(-0.0)	(-0.4)	(-0.7)	(-0.8)	(-0.8)	(-0.8)	(-0.8)	(-0.9)	(-0.9)	
지출통제	0.0	-0.9	-8.5	-16.6	-18.7	-7.9	3.7	15.9	28.3	40.9	36.3
(GDP 대비 비율)	(0.0)	(-0.0)	(-0.4)	(-0.7)	(-0.8)	(-0.3)	(0.1)	(0.6)	(1.0)	(1.5)	
세입확충	0.0	-0.9	13.7	6.9	6.0	30.7	32.3	34.0	35.2	36.5	194.6
(GDP 대비 비율)	(0.0)	(-0.0)	(0.6)	(0.3)	(0.3)	(1.3)	(1.3)	(1.3)	(1.3)	(1.3)	
정책조합	0.0	-0.9	13.7	6.9	6.0	42.7	56.9	71.7	86.8	102.2	386.0
(GDP 대비 비율)	(0.0)	(-0.0)	(0.6)	(0.3)	(0.3)	(1.7)	(2.3)	(2.7)	(3.2)	(3.7)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데, 기준전망과 비교할 때 연도별로 $\Delta 1.0 \sim \Delta 2.9$ 조원 낮으며, 향후 10년 동안 20.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 인상폭과 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표 6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단위: 조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중기재정전망(A)	35.7	38.0	44.6	44.0	44.1	43.9	44.0	46.6	46.1	45.8	
기준전망(B)	35.7	40.7	45.7	46.1	46.2	46.1	46.4	49.2	48.8	48.7	
차 이(A-B)	0.0	-2.6	-1.0	-2.1	-2.1	-2.2	-2.4	-2.5	-2.7	-2.9	-20.6

주: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전망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함

라.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국가채무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158.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30년 기준으로 78.9%로 기준전망(73.2%)에 비해 5.7%p 상승한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의 국가채무 비율은 72.3%로 기준전망보다 0.8%p 하락하고,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67.1%로 기준전망 대비 6.1%p 하락한다. 끝으로, 지출통제 및 세입확충의 정책을 조합하는 정책조합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60.6%로 기준전망보다 12.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3] 시나리오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중기재정전망(A)										
현상유지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75.4	1,712.3	1,867.4	2,029.5	2,198.8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5)	(67.8)	(71.6)	(75.2)	(78.9)
지출통제	965.9	1,072.6	1,185.3	1,310.6	1,441.1	1,564.0	1,677.6	1,796.8	1,909.9	2,016.7
(GDP 대비 비율)	(47.3)	(50.4)	(53.7)	(57.4)	(61.0)	(64.1)	(66.5)	(68.9)	(70.8)	(72.3)
세입확충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65.6	1,551.9	1,654.0	1,760.4	1,871.4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60.0)	(61.5)	(63.4)	(65.2)	(67.1)
정책조합	965.9	1,072.6	1,167.4	1,272.4	1,379.4	1,454.2	1,517.2	1,583.4	1,640.8	1,689.3
(GDP 대비 비율)	(47.3)	(50.4)	(52.9)	(55.7)	(58.4)	(59.6)	(60.1)	(60.7)	(60.8)	(60.6)
기준전망(B)	965.9	1,067.6	1,172.0	1,281.2	1,390.1	1,504.4	1,622.3	1,756.0	1,895.3	2,040.3
(GDP 대비 비율)	(47.3)	(50.2)	(53.1)	(56.1)	(58.9)	(61.6)	(64.3)	(67.3)	(70.2)	(73.2)
차 이(A-B)										
현상유지	0.0	5.0	13.2	29.4	51.0	70.9	90.0	111.4	134.2	158.5
(GDP 대비 비율)	(0.0)	(0.2)	(0.6)	(1.3)	(2.2)	(2.9)	(3.6)	(4.3)	(5.0)	(5.7)
지출통제	0.0	5.0	13.2	29.4	51.0	59.6	55.3	40.8	14.6	-23.6
(GDP 대비 비율)	(0.0)	(0.2)	(0.6)	(1.3)	(2.2)	(2.4)	(2.2)	(1.6)	(0.5)	(-0.8)
세입확충	0.0	5.0	-4.7	-8.8	-10.7	-38.9	-70.4	-102.1	-134.9	-168.9
(GDP 대비 비율)	(0.0)	(0.2)	(-0.2)	(-0.4)	(-0.5)	(-1.6)	(-2.8)	(-3.9)	(-5.0)	(-6.1)
정책조합	0.0	5.0	-4.7	-8.8	-10.7	-50.3	-105.1	-172.6	-254.5	-351.0
(GDP 대비 비율)	(0.0)	(0.2)	(-0.2)	(-0.4)	(-0.5)	(-2.1)	(-4.2)	(-6.6)	(-9.4)	(-12.6)

주: GDP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임

IV. 요약 및 결론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재정기조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전망기간 동안 인구 흐름이나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다든지, 정부 정책 및 그 기조의 변화가 있다면 전망 결과는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정전망은 미래의 재정흐름을 날씨예보처럼 예측(forecasting)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일정한 전제 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그 기조가 유지될 경우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재정적 결과를 추계(projection)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번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재정총량지표들의 변화를 전망한 것이다.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거시경제 상황, 재정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여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먼저,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총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세법개정안,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계획도 반영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수준을 반영하였다. 이때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점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출통제 시나리오는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수준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며, 세입확충 시나리오는 조세부담률을 2023년에 1%p, 2026년에 추가로 1%p 인상하는 정책 대안이다. 끝으로,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와 세입확충 시나리오의 정책 대안을 조합한 것이다.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7.3%에서 2030년 78.9%로 증가

한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이 72.3%,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확충 시나리오에서는 67.1%, 정책조합 시나리오에서는 60.6%로 각각 전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 비율(80.9%, 2019년 D2 기준 단순평균)³⁷⁾과 유사하거나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큰 이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상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상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3~30년 동안 지속적으로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되어 과거 경제위기 시에 경험했던 높은 재정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³⁸⁾ 또한, 향후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참고로,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국가채무의 비율은 58.8%,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0%로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적용하려는 「한국형 재정준칙」³⁹⁾의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상황 또는 경상GDP 전망치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설계한 재정준칙의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끝으로,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 시점(2021.9.3.)의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준전망을 비교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37) 국가채무(D1)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의 단순평균이다.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10. Vol.93.)를 참고하였다.

38) 과거 주요 경제위기 시점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6%,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6%,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5.8%였다.

39)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정부가 2020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것으로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경기둔화시 △4%)를 기준으로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설계한 재정준칙을 말한다. 만일 경기둔화가 나타나지 않는 평상시에 (국가채무 비율/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3%)를 곱한 수치가 1이라는 한도를 넘는 경우, 정부는 동 수치가 다시 1이라는 한도 이내로 복귀하도록 지출 효율화, 수입 확충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다음 회계연도부터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전망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수입은 기준전망 대비 10년 간 61.9조원 낮고, 총지출은 113.8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통합재정수지는 2030년 기준으로 경상GDP 대비 1.0%p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5.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재량지출 수준을 동결하거나 조세부담률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할 경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기준전망 대비 모두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부 록

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중기 재정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를 포함한 5개년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총수입은 548.8조원, 총지출은 604.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94.7조원 적자 예상, 관리재정수지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2년 이후 △4% 수준 유지
 - 국가채무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6.4	4.7
총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5.5	3.4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75.4 (-3.7)	-90.3 (-4.4)	-55.6 (-2.6)	-64.5 (-2.9)	-69.4 (-3.0)	-72.6 (-3.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2.5 (-5.6)	-126.6 (-6.2)	-94.7 (-4.4)	-104.7 (-4.7)	-108.4 (-4.7)	-109.2 (-4.6)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956.0 (47.3)	965.3 (47.3)	1,068.3 (50.2)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10.2	9.9
경상GDP 성장률		5.6*	4.2*	4.0	4.0	4.0		

주: 1. GDP는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임(*2021.6.28 발표)

2. 2021년 추경(2회) 기준 국가채무는 965.3조원이나, 정부의 2021년말 전망치는 965.9조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9.)

- NABO와 정부가 전망에 적용한 경상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한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5.6%에서 2022년 4.2%로 하락한 후 2022~2024년간 4.0% 유지
 - 이와 비교하여 NABO가 전망에 적용한 경상GDP 성장률은 2021년 5.6%에서 2022년 4.2%로 하락한 후에도 2023년 3.7%, 2024년 3.5%, 2025년 3.4%로 하락할 전망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단위: %, %p)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중기재정전망(A)	0.4	5.6	4.2	3.7	3.5	3.4
국가재정운용계획(B)	0.4	5.6	4.2	4.0	4.0	4.0
차이(A-B)	-	-	-	-0.3	-0.5	-0.6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 NABO 중기재정전망 중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중기재정전망의 총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연도별로 △0.5~11.8조원의 차이가 있음(5년 동안 14.8조원 높음)
 -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연도별로 2.1~9.5조원의 차이가 있음(5년 동안 29.2조원 높음)
 - 중기재정전망의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연도별로 △6.7~6.8조원의 차이가 있음(5년 동안 14.5조원 낮음)
 - 중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연도별로 4.3~32.6조원 높음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총수입	11.8	3.3	-0.5	-0.3	0.5	14.8
국세수입	8.8	2.3	-5.5	-5.6	-5.7	-5.8
국세외수입	3.1	1.0	5.0	5.3	6.2	20.5
총지출	5.0	9.5	2.1	5.3	7.3	29.2
의무지출	5.0	9.5	2.1	5.3	7.3	29.2
재량지출	0.0	0.0	0.0	0.0	0.0	0.0
통합재정수지	6.8	-6.3	-2.6	-5.6	-6.7	-14.5
(GDP 대비 비율)	(0.3)	(-0.3)	(-0.1)	(-0.3)	(-0.4)	
관리재정수지	7.3	-5.2	-7.1	-10.6	-14.2	-29.7
(GDP 대비 비율)	(0.4)	(-0.3)	(-0.4)	(-0.5)	(-0.6)	
국가채무	0.0	4.3	9.9	19.1	32.6	
(GDP 대비 비율)	(0.0)	(0.2)	(0.6)	(1.3)	(2.2)	

주: 1.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중기재정전망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치에 근거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에 근거함

2.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 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세수입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5.8조원 낮고, 국세외수입은 20.5조원 높음

- 국세수입의 경우, NABO는 2021년 8월까지 국세수입 실적⁴⁰⁾ 등을 반영하여 2021년 국세수입을 추경보다 8.8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 2022년은 정부와 NABO의 경상GDP 성장률 전망이 동일함에도 NABO의 전망이 정부 예산안보다 2.3조원 높은데, 이는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1년 국세수입을 NABO가 높게 전망한 것에 기인
- 2023년 이후의 차이는 경상GDP 성장률 전망의 차이에 기인
 - 2023년 이후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 전망이 NABO에 비해 대비 연 0.3~0.6%p 높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보다 높음

40) 2021년 8월까지의 국세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5.7조원 증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국세수입의 전년실적 대비 초과분(28.7조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 또한 2021~2025년간 경상GDP 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탄성치를 계산해보면 정부(1.25)는 국회예산정책처(1.07)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GDP 성장률에 더 크게 반응
- 국세외수입의 경우, NABO의 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는 주로 기금수입에서 발생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민연금기여금은 2021년 50.8조원에서 2025년 54.7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계획인 반면, NABO의 전망은 2021년 50.2조원에서 2025년 57.7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전망
 -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년 18.8조원에서 2025년 21.1조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계획이나, NABO의 전망은 2021년 22.1조원에서 2025년 26.8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수입

	주요 요인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2년) 2021년 세수전망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의 전망이 정부 추경 대비 8.8조원 상회 ○ (2023년 이후) 경제전망 등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전망: 2023년 이후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 전망은 NABO 대비 0.3~0.6%p 상회
국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기여금 및 기금운용수익 전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의 전망이 정부 계획 대비 23.1조원(5년 합계) 상회 2021년 2.7조원, 2022년 1.7조원, 2023년 3.9조원, 2024년 6.1조원, 2025년 8.7조원 상회

- 재량지출의 경우 2021~2025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과 동일하게 가정하였으므로 총지출의 차이는 의무지출에서 기인
 - 의무지출의 각 부문별 차이를 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국민연금의 의무지출 차이(8.1조원)가 큼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년 29.2조원에서 2025년 40.4조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할 계획이나, NABO의 전망은 2021년 30.2조원에서 2025년 42.5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전망

-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재원인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의 전망 차이에서 기인⁴¹⁾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지출

	주요 요인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분야) 급여지출 전망모형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의 전망이 정부 계획 대비 13.8조원(5년 합계) 상회 ○ (지방이전재원)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담뭏값 개별소비세 전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의 전망이 정부 계획 대비 7.8조원(5년 합계) 상회

41) 2021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1년 4월에 이루어진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2.3조원)을 지방이전재원에 포함하였다.

2. 주요국의 중기재정전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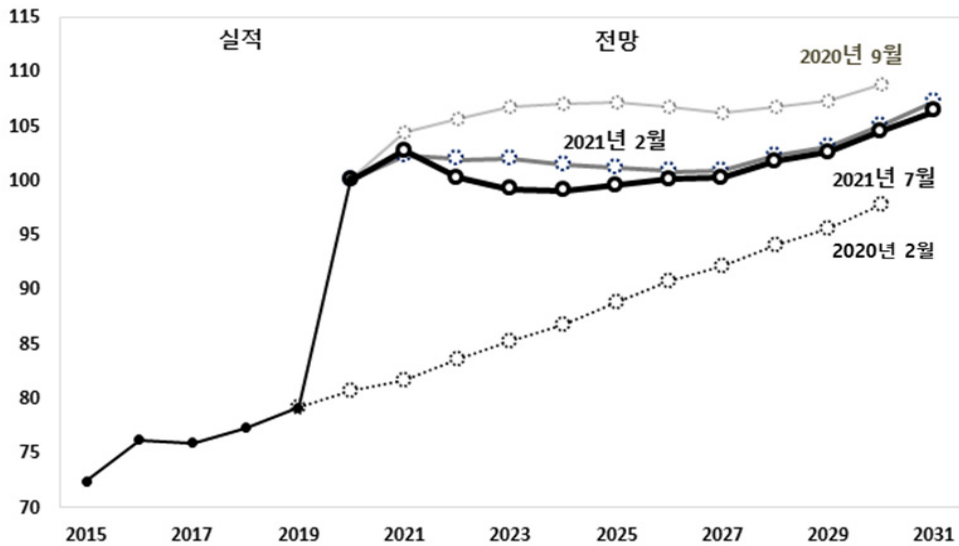
가.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중기 재정전망⁴²⁾

(1) 연방정부 부채 전망

- (2020년 2월 전망)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표된 재정전망은 연방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9월 전망)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이에 대응한 고용 안정 목적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실업수당 등의 지출 급증 등에 따라 연방정부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5년에는 107.2%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2월 전망) 실업률 등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이 2020년 9월 전망에 비해 개선됨에 따른 연방정부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1년에 102.3% 기록 후 2026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2021년 7월 전망) 2020년 2월 전망에 비해 경제전망이 개선됨에 따른 연방정부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2022년 이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21년 2월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42) 재정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2021 회계연도는 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의 기간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2015년~2031년 연방정부 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의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202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전망별 주요 내용

- 2021년 2월 재정전망은 2021년 재정적자가 2020년 9월의 재정전망에 비해 4,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2조 2,580억 달러, GDP 대비 10.3% 수준), 이는 법률상의 변화(+9,000억 달러) 및 경제환경의 변화·기술적 변화에 따른 변화 때문임(각각 -3,000억 달러, -2,000억 달러)
 - 주요 법률상의 변화는 2021년 3월 11일에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 Act”(ARPA)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지원, 실업급여를 기존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
 - 단, 전망기간(2021~2031년) 전체적으로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수입 증가로 재정적자가 2020년 9월의 재정전망에 비해 8,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2031년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830억 달러, GDP 대비 5.7% 수준)

- 2021년 7월 재정전망은 2021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2021년 2월의 재정전망에 비해 7,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3조 달러, GDP 대비 13.4% 수준), 이는 법률상의 변화(+1조 1,000억 달러) 및 경제환경의 변화·기술적 변화에 따른 변화 때문임(각각 -2,000억 달러)
 - 주요 법률상의 변화는 2021년 4월 14일에 통과된 “Public Law 117-7”로, 2021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메디케어에 대한 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의 일시적 연장(2021.12.31.)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의 내용을 포함
 - 단, 전망기간(2022~2031년) 전체적으로는, 경제환경의 변화 및 기술적 변화에 따른 연방정부의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재정적자가 2021년 2월의 재정전망에 비해 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2031년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550억 달러, GDP 대비 5.5% 수준)

나. 영국 예산책임처(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중기재정전망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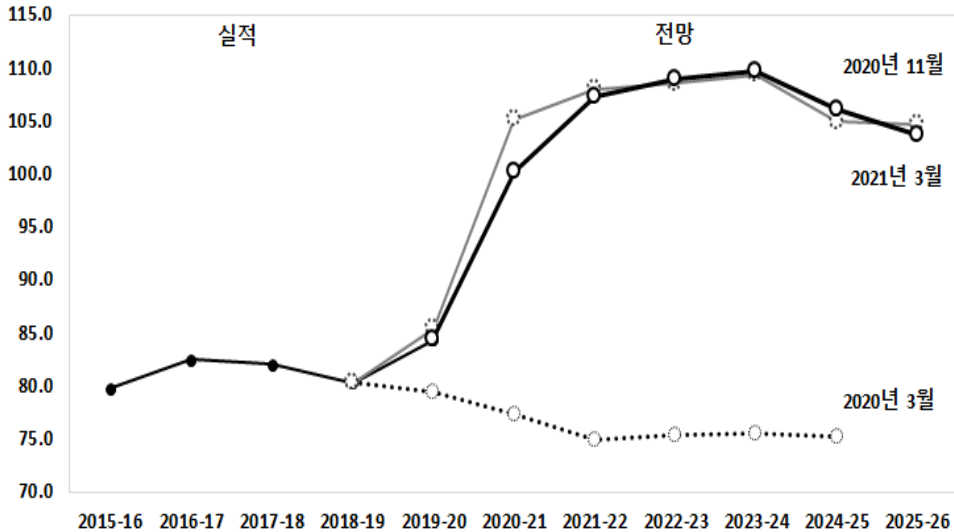
(1) 공공부문(중앙·지방정부, 공기업) 부채 전망

- (2020년 3월 전망)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표된 재정전망은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1-22까지 감소한 후 2021-22부터는 75.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11월 전망) 코로나19 확진자 수 전망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2021년 7월까지 모든 성인 대상 1차 접종 완료), 2021년 3월까지 관광·의료 부문 부가가치세 인하(20%→5%)에 따른 수입 감소 전망,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제도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전망 등을 반영하여 2020-21회계연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5.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43) 재정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2020-21회계연도는 2020년 4월 6일~2021년 4월 5일의 기간을 의미한다.

- (2021년 3월 전망) 실업률, GDP 등 주요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이 2020년 11월 전망에 비해 개선됨에 따라 2020-21회계연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11월 전망에 비해 5.0%p 낮은 100.2%로 전망

영국 예산책임처의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2015년~2025년 공공부문 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의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1(2021.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전망별 주요 내용

- 2020년 11월 재정전망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영국 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정책 중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제도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2020년 2월 28일 기준 국제청에 신고된 급여명세서에 등재된 직원을 고용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직원 월급여의 최대 67%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종료일이 2020년 10월 31일로 연장
 -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는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연평균 소득 5만 파운드 이하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간 평균 월수익의 80%

(최대 7,500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지급

- 이 외에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매출의 25% 범위 내에서 2,000~50,000파운드를 10년 분할상환 조건(연이율은 2.5%)으로 대출해 주는 회복지원대출제도 등도 시행

□ 2021년 3월 재정전망은 기존 코로나19 대응정책 종료 시점의 연장 및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의 코로나 대응 로드맵 등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변수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

- 백신 보급 이후의 코로나 대응 로드맵은 2021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허용하고, 2021년 6월 12일부터는 모든 형태의 사회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한편,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2021년 2분기의 실업률은 5.2%로 하향 전망(2020년 11월 전망에서는 7.5%로 전망)하였고, 2020-21회계연도의 실질 GDP는 1조 9,570억 파운드(2020년 11월 전망에서는 1조 8,800억 파운드)로 전망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2021년 10월 29일
발행인 임 익 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BN 979-11-6799-032-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678-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